

2016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작성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6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6월

작성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정 섭	연구위원
연구책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 경 찬	연구원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 은 영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정 해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유 리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 지 속	연구원

목차 | Contents

I

개요	1
1. 평가 목적, 대상, 방법	3
2. 시행계획 추진 실적	6
3. 예산 집행 현황	11

II

부문별 시행계획 평가 결과	15
1. 보건·복지	17
2. 교육	33
3. 정주생활기반	40
4. 경제활동·일자리	53
5. 문화·여가	72
6. 환경·경관	82
7. 안전	96

부록	113
----------	-----

section

I

개요

1. 평가목적, 대상, 방법
2. 시행계획 추진 실적
3. 예산 집행 현황

1. 평가 목적, 대상, 방법

1.1. 평가의 목적 및 대상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당해 연도 계획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6조).

◆ 「농어업인 삶의 질 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실무위원회가 매년 시행계획을 점검·평가토록 규정함에 따라 점검·평가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목적은 18개 부·처·청에서 추진하는 '삶의 질 정책' 추진 과정과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대책과 신규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3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3개년에 걸쳐 모든 과제를 나누어 평가하고 2019년에 기본계획 전반을 평가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182개 과제 중 58개 과제를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과제 단위뿐 아니라 정책군(부문) 수준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과제 단위의 서면평가와 정책군 수준의 지역평가를 수행하였다. 대상 정책 과제의 2016년 실적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에 걸쳐 점검·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의 위원회 보고는 2017년 3월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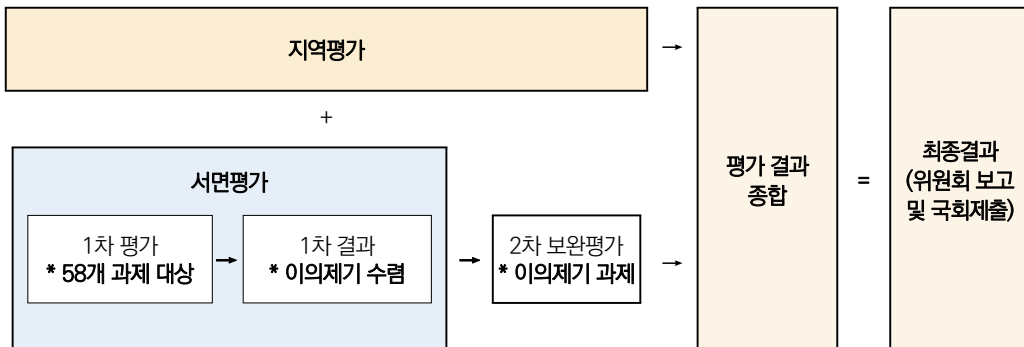
1.2. 평가 방법

정책 과제마다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우수 및 부진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하였다.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삶의 질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서비스 전달, 주민 체감도 중심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평가는 전문지원기관(KREI*)에서 구성한 점검·평가단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점검·평가단은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등 삶의 질 업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하였다. 서면평가는 각 부·처·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과제의 지역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다. 평가위원은 최소 3개 이상의 정책 과제에 대해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의견을 종합한 과제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각 부·처·청의 이의 제기를 수렴하여 보완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된 후 삶의 질 위원회에 최종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림 1.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법



평가는 계획, 집행, 성과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계획 부분에서는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적합성, 추진 방식의 합리성,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였다. 집행 부분에서는 예산 집행 및 확보 실적, 추진 일정 준수 등을 평가하였다. 성과 부분에서는 성과 목표 달성도, 삶의 질 향상 기여도, 기타 정책 효과 등을 평가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말한다.

표 1. 평가 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1. 계획	1-1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적합성	• 제3차 기본계획상의 부문별 목표와 비전에 대한 사업 목표의 적합성
	1-2 추진 방식의 합리성	• 세부 추진체계의 현실 적합성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2. 집행	2-1 집행 및 예산 확보	• 예산 집행 실적 및 차년도 예산 확보
	2-2 일정관리	• 추진 일정 준수
3. 성과	3-1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3-3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3-4 기타 정책효과	• 정책 환류 노력도, 언론보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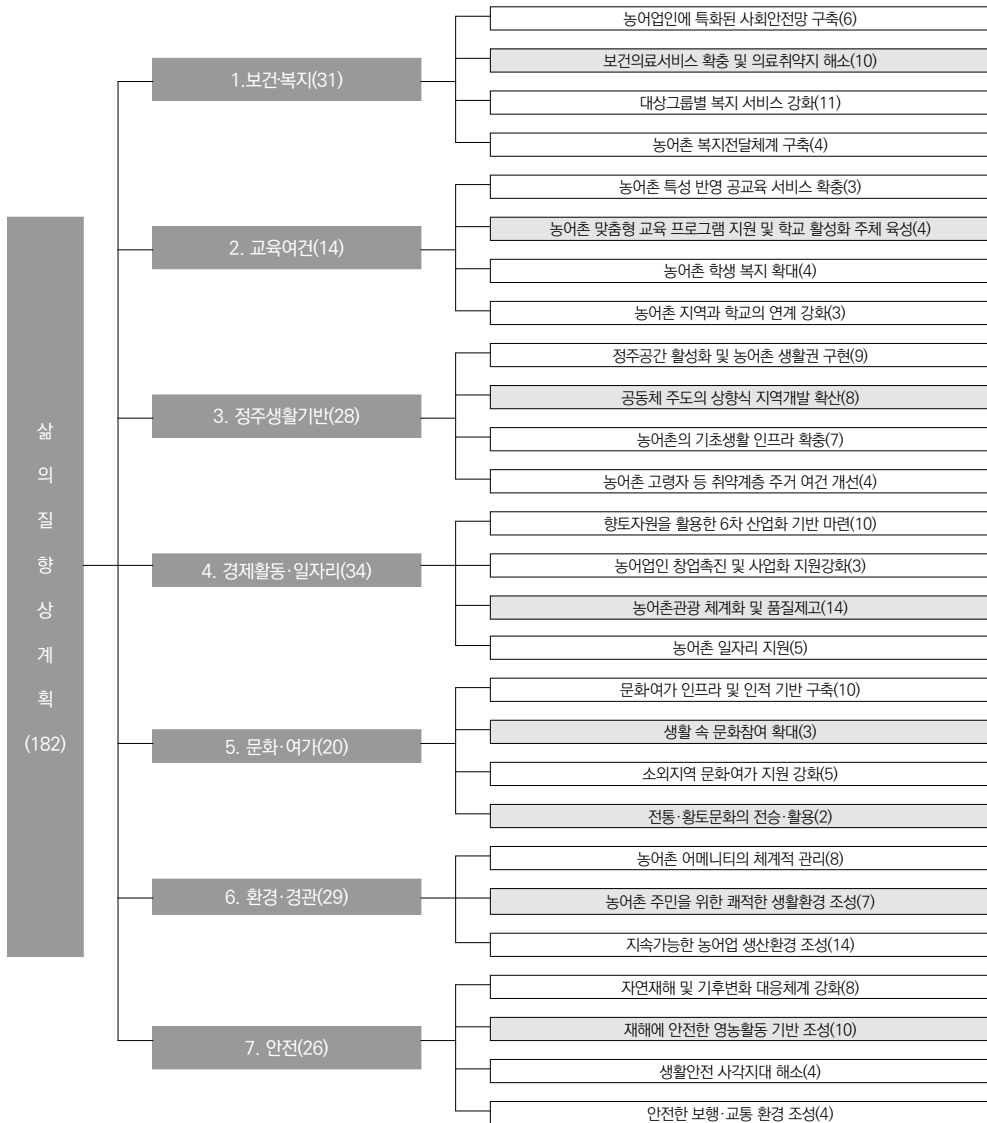
표 2. 평가 일정

구분	세부 내용	일정	비고
평가지침 수립	• '16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마련	'16.11월	사무국
	• '16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 송부	~'16.11월	사무국 → 각 부처
추진실적 평가	• '16년도 시행계획 평가보고서 제출	~'16.12.9	각 부처 → 사무국
	• 1차 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17.1월	점검·평가단 사무국 → 각 부처
	•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17.2월	각 부처 → 사무국
	• 2차 보완 평가	~'17.3월	점검·평가단
	• 평가결과 통보	'17.3월	사무국 → 각 부처
	• 삶의 질 위원회 보고 및 결과 발표	'17.3월	삶의질위원회
평가결과 활용	• 우수사례집 발간 등	수시	사무국

2. 시행계획 추진 실적

2016년 시행계획의 추진 과제는 182개였다. 그 중 8개 정책군, 58개 과제에 대해 점검·평가하였다.

그림 2. 2016년 시행계획 추진 과제



* 음영 표시한 항목은 2016년 점검·평가 대상 정책 과제를 의미함.

2.1. 보건·복지 분야

2016년 보건·복지 분야의 점검·평가 대상 과제는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이다. 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등 총 10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의 시설 확대 및 장비 현대화
 - 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지방의료원 7개소), 보건의료 시설 개선 지원(104개소), 보건의료 장비 지원(740개소), 차량 지원(80개소), 병원선 수리비 지원(5척), 낙도 지역 안전쉼터 조성(20개소)
- 보건기관에 대한 만족도 및 이용자 증가율 상승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만족 응답자 비율('15년 91.6% → '16년 91.9%), 이용자 증가율('15년 2.0% → '16년 2.8%)
- 농어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지원(108개소), 원격협진 참여 의료기관 확대('15년 39개소 → '16년 85개소)

2.2. 교육 분야

2016년 교육 분야의 점검·평가 대상 과제는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이다. 농어촌 교육지원 체계화 등 총 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 학교장 리더십 연수(100명), 우수 중학교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7개 권역, 102명 참여), 농산어촌 ICT사업 지원(4,000개교)
- 도시 지역과의 교육 격차 해소
 - Talk 원어민 장학생 배치(482명), 원격 영상 진로멘토링 운영 확대('15년 1,500개교 → '16년 1,700개교), 농어촌 지역 우수 교원 유치(82명)

2.3. 정주생활기반 분야

2016년 정주생활기반 분야의 점검·평가 대상 과제는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이다.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 등 총 8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확산과 지역 인력 역량 강화
 - 농촌 현장포럼(418개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참가 마을 2,664개), 현장 활동가 육성(2,081명)
- 체계적 귀농·귀촌 준비 기반 마련
 - 귀농인의 집(70개소), 귀농·귀촌 정책 자금 지원(268가구), 귀농·귀촌 교육(7,383명)
- 농촌 마을 특성에 맞는 맞춤형지역개발 사업 발굴
 - 정주여건 진단지표 개발

2.4. 경제활동·일자리 분야

2016년 경제활동·일자리 분야의 점검·평가 대상 과제는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 제고'이다. 농어촌 관광 품질 제고 등 총 1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
 - 농촌체험마을 등급제 실시 마을 확대('15년: 650개 → '16년: 1,100개), 자연휴양림(17개소), 치유의 숲 조성(28개소)
- 농촌관광 관광객 수 및 만족도 제고
 - 농촌체험휴양마을 평균 방문객 증가율(3.9%), 산림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인원(255만 9000명)
- 사업 주체 역량 강화
 -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 육성(신규 40개, 누계 158개), 농촌 교육농장 육성(신규 48개, 누계 573개)
-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다변화
 - 전통주(찾아가는 양조장: 6개소, 누계 22개소), 향토음식 체험프로그램(7개)

2.5. 문화·여가 분야

2016년 문화·여가 분야의 점검·평가 대상 과제는 '생활 속 문화 참여 확대'와 '전통·향토 문화의 전승·활용'이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총 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
 -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69개), 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수혜자 수 6만 4870명, 수혜자 만족도 88.1점), 문화마을 조성 지원(29개소, 1개소당 연 1억 원, 3년 간 지원)
-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 지원(16개 사업),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지원(43개 축제)

2.6. 환경·경관 분야

2016년 환경·경관 분야의 점검·평가 대상 과제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등 총 7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농촌 자원 순환 인프라 구축
 -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대(신규 10개소, 계속 4개소),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확충(166개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950개소)
-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및 마을 공동체 회복
 - 도랑 살리기(77개, 사후관리 31개소 포함),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16년 4만 9,000톤 수거)
- 친환경에너지타운 명소화 및 전국 확산 추진
 - 친환경에너지타운 확대(신규 5개소)

2.7. 안전 분야

2016년 안전 분야의 점검·평가 대상 과제는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총 10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및 경영 불안 해소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15년 4.3%(5만 건) → '16년 5.0%(5만 9000건), 벼 보험 가입 면적 전년 대비 80% 증가('15년 13만 7000ha → '16년 24만 7000ha)
- 농어업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
 - 농업인 중대 사고사례 조사·분석(600건), 어업인 질환 예방 가이드 발간(3종)
-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개선
 - 농작업 교육매체 개발(14건), 농작업 안전 정보화 접속(21만 8606회), 편이장비 산업체 기술 이전(6건)

3. 예산 집행 현황

7대 분야	과제명	정책사업	'16년 계획 예산 (백만 원)	계획대비 집행률 (%)
1. 보건복지	1-2-1-1. 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1)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2)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123,132	99.6
	1-2-1-2.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농어촌 등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58,798	100.0
	1-2-1-4. 낙도지역어업인지원시범사업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사업	2,000	100.0
	1-2-2-1. ①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29,798	99.9
	1-2-2-1. ②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펄블런스 운영	비예산	-
	1-2-2-2.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1,450	100.0
	1-2-4-1.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66,664	100.0
	1-2-4-2. ①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사업	1,805	100.0
	1-2-4-2. ②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사업	990	100.0
	1-2-4-3. 정신보건센터 확충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29,688	100.0
	총액		424,325	99.9
2. 교육여건	2-2-1-1. 농어촌교육지원 체계화	농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	300	100.0
	2-2-1-2.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	7,822	95.3
	2-2-2-1. 농어촌학교 진로교육 강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업	3,400	100.0
	2-2-3-1. 농어촌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1) 농어촌학교에 대한 교장 공모확대 2) 농어촌학교 교원 배치 내실화 3) 농어촌신규교원육성	비예산	-
		총액		11,522

(계속)

7대 분야	과제명	정책사업	'16년 계획 예산 (백만원)	계획대비 집행률 (%)
3. 정주생활 기반	3-2-1-1.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4,159	100.0
	3-2-1-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906	100.0
	3-2-1-3. 농어촌마을 유형별·역량단계별 개발	정주여건 진단지표 개발 사업	비예산	-
	3-2-2-1. 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29,319	100.0
	3-2-2-1. ②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귀어귀촌활성화사업	6,337	84.4
	3-2-2-1. ③ 귀산촌 활성화 지원	귀산촌 체험 stay	80	100.0
	3-2-2-2. 산촌주민 역량강화사업	산림분야 6차 산업화 육성	820	100.0
	3-2-2-3.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350	100.0
	총액		41,971	97.6
4. 경제활동 일자리	4-3-1-1. 농어촌 관광 품질 제고	농어촌 관광 품질 제고사업	463	100.0
	4-3-1-2. 관광두레 조성	관광두레 조성	4,000	100.0
	4-3-2-1. 농촌관광 품질 제고 (농식품부)	1) 농촌관광 등급결정사업 2)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사업	963	100.0
	4-3-2-2.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	16,741	100.0
	4-3-2-3.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6차 산업화지원 사업	10,291	98.1
	4-3-3-1. 산림휴양·치유공간 조성	산림휴양교육활성화,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14,091	92.3
	4-3-3-2.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사업	25,598	100.0
	4-3-3-3. 말산업 육성 지원	말산업육성지원사업	65,919	96.7
	4-3-3-4. 음식관광 활성화 지원	1)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2) 전통주 갤러리 사업 3) 전통식품 체험프로그램 확대	3,200	90.6
	4-3-3-5.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400	100.0
	4-3-3-6.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촌교육농장 육성 사업	1,200	100.0
	4-3-3-7. 농촌유학 활성화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	640	100.0
	4-3-3-8. ① 농가-마을-거점 농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38,191	54.9
	4-3-3-8. ② 농어가-마을-거점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어촌체험관광지원사업	7,972	100.0
		총액		289,669

(계속)

7대 분야	과제명	정책사업	'16년 계획 예산 (백만원)	계획대비 집행률 (%)
5. 문화여가	5-2-1.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5,500	70.4
	5-2-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공동체사업	1,080	100.0
	5-2-3.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	7,200	100.0
	5-4-1.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사업	17,866	100.0
	5-4-2. 문화관광 축제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11,984	284.9
		총액	83,630	110.4
6. 환경경관	6-2-1-1.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11,221	100.0
	6-2-1-2.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2,764	100.0
	6-2-1-3.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원	14,193	100.0
	6-2-2-1. 주민참여형 마을 도랑 살리기	도랑살리기사업	1,408	100.0
	6-2-2-2.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0,471	100.0
	6-2-2-3. 갯벌생태계 복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6,290	112.5
	6-2-3-1.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3,300	100.0
		총액	69,647	101.1
7. 안전	7-2-1-1.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64,014	81.9
	7-2-1-2. 농업인 업무상재해 보장제도 지원	농업인 업무상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사업	450	100.0
	7-2-1-3.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사업	1,609	90.2
	7-2-1-4.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	112,650	100.0
	7-2-2-1.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업재해보험사업	304,551	98.9
	7-2-2-2. 어업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사업	22,200	100.0
	7-2-3-1.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현황 조사	어업인 질환현황 조사 사업	200	87.5
	7-2-3-2. 농업인 업무상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상 재해 모니터링 구축 사업	520	100.0
	7-2-3-3. 농작업안전관리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2,490	100.0
	7-2-3-4.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사업	380	100.0
	총액	519,064	97.1	
총계	총액	1,439,828	97.5	

* 지자체의 추가 예산 집행으로 계획대비 집행률이 높음.

section

II

부문별 시행계획 평가 결과

1. 보건·복지
2. 교육
3. 정주생활기반
4. 경제활동·일자리
5. 문화·여가
6. 환경·경관
7. 안전

1. 보건·복지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들은 농어촌에 필요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사업과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은 의료·복지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현대화된 의료 시설·장비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취약성에 비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였다.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인구 구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농어촌 지역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환류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지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점추진과제	평가대상 과제	담당기관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10)	1-2-1-1. 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 의료인력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1-2-1-2.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1-2-1-4.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 시범사업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1-2-2-1. ①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2-2-1. ②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1-2-2-2. 분만취약지 지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1-2-4-1.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1-2-4-2. ①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1-2-4-2. ②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1-2-4-3.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1-2-1-1. 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 의료인력 역량 강화(보건복지부)

1) 사업 개요

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 의료인력 역량 강화 과제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부터 추진해 2016년까지 6,397억 200만 원을 투입하였다. 2016년 지역 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 30개소와 적십자 병원 5개소에 각각 370억 2,000만 원, 5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완화의료·감염격리·정신건강·응급 의료 등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있거나 필수 의료임에도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해 164억 2,600만 원을 18개소에 나누어 투입하였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서는 대학병원에서 농촌 지역으로 파견된 61명의 의료 인력에게 52억 5,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2) 평가 내용

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 의료인력 역량 강화 과제는 농어촌에 필요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목표에 부합한다. 중장기 수요 조사와 거점공공병원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며,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개 성과지표 중 1개인 인증 획득 기관수가 예측치만 제공되어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계획 측면에서는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 체감 증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개발하고 공공보건의료 시설·장비를 현대화한다는 목적에 맞게 세부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 기관 수'와 '병원 운영 평가 점수' 외에 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 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집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정 집행률은 2016년에 99.6%로 탁월한 수준이지만, 예산

확보 상황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개소마다 2명 수준, 기능보강 사업은 개소마다 16억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현재의 열악한 지방의료원 현실을 감안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2017년 예산이 감소된다면 계획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 거점공공병원의 지속적인 시설·장비 현대화와 우수 의료 인력 확보는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개선 사항

사업 방향과 성과 측정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요구가 높은 분야와 미충족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기능특성화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면 인건비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을 집중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의 경우 교수급 인력이 파견되지 않아 현장에서 사업 효용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력의 이직률이 높아서 환자 입장에서 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고, 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제약이 따른다.

그리고 성과 측정을 위해 보다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과지표가 사업 내용과 직관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지역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보완되도록 성과지표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다 세부적인 산출지표로 의료 서비스 기능 확충 수준, 의료인력 파견 실적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 과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사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성과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성과 측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2-1-2.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보건복지부)

1) 사업 개요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보건의료 장비 및 차량 공급 사업, 병원선 수리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1994년부터 추진해 2016년까지 9,386억 원을 투입하였다. 2016년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보건기관 104개소를 신설·신축, 증축, 보수하려고 27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보건소 100개소, 보건지소 307개소, 보건진료소 323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개소, 병원선 3척에 89억 2,900만 원을 들여 보건의료 장비를 지원하였다. 보건소 77개소, 보건지소 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에 20억 3,200만 원을 투입해 차량을 지원하였다. 병원선 수리비 지원 사업에서는 5척의 병원선에 대해 9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내용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과제는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건기관의 양적·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수혜자의 체감 효과를 강화했다. 그리고 공공보건기관에서 농어촌 주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였다.

계획 측면에서는 농어촌 맞춤형으로 설계된 정책으로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변화, 농어촌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향후 관리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집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정 집행률은 2016년 100.0%로 탁월한 수준이다. 성과 측면에서는 2개 성과지표의 점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목표치에 근접하였다. 이용자 만족도는 92.0%(사업에 '만족'으로 응답한 대상자 수 / 사업 대상 보건소 이용자 수)로 목표치 92.2%에 조금 못 미쳤다. 이용자 증가율은 2.80(시설개선 후 이용자 수 - 시설개선 전 이용자 수 / 시설개선 전 이용자 수 × 100)으로 목표치 2.82에 거의 근접했다.

3) 개선 사항

지금까지의 사업이 주로 농어촌 공공보건기관의 하드웨어 측면을 강화하는 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인력 양성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장기적인 투자 방향을 개선하려면 농어촌 인구 고령화, 교통여건 변화 등 관할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걸맞는 맞춤형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설·장비 현대화와 더불어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부 공공보건기관의 유휴 시설·장비 활용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려면 공공보건기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집중 지원해야 한다. 공공보건기관이 기능 및 역할을 적절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지원 면적 재산정 및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기관에 비치한 시설·장비의 활용성이 낮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1-2-1-4.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 시범사업

1) 사업 개요

갑작스런 일기 변화에 대비하고, 평상시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어업 작업 전후 탈의할 수 있는 안전 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입하였다. 안전 쉼터 1개소 당 1억 원을 투입하여 총 20개소를 조성하였다(10개소 완료, 나머지 10개소는 추진 중이며 2017년 상반기 완료 예정).

2) 평가 내용

안전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어업 작업 도중 갑작스런 기상 변화 시 어업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어업인의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어업 작업장 가까운 곳에서 탈의하거나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어 어업 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위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

획('18~'27) 수립 시 해수부에서 수립한 '낙도 지역 어업인 지원 대책'을 반영하여 낙도 지역 어업인의 복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 측면에서는 어촌 지역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성과 지표로는 실제 활용도와 주민들의 체감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상위 과제인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 취약지 해소' 부문과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집행 측면에서는, 보조금 배정이 늦어져 일정이 다소 늦춰졌으나, 사전 시행한 사업은 일정에 따라 추진하였고 재정 집행률은 2016년에 100.0%이었다. 2016년 목표치인 안전 쉼터 20개소 중 10개소만 완료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사업비 배정이 늦어져 추진 중에 있다.

3) 개선 사항

낙도 지역 어업인 안전 쉼터 조성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조성한 안전 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 분류를 조정해야 한다.

1-2-2-1. ①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1) 사업 개요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 운영비 및 신규 구축 지원 사업, 취약지역 응급실 원격 협진 및 간호 인력 파견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97억 6,800만 원을 투입하였다. 2016년 102개 응급의료 취약지역 내 108개소의 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신규 구축을 위해 26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원격협진 참여 의료기관을 2015년 39개소에서 2016년 85개소로 확대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5개소에 간호 인력을 파견하는 시범 사업을 위해 9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 평가내용

농어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

다.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응급의료 원격협진으로 취약지 병원에서도 영상 관독이 가능하게 된 사례가 생겼다. 거점 병원과 협진 시스템을 운영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계획 측면에서는, 사업 수행 방식이 다양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원 대상 취약지역을 각종 지표(인구, 면적, 재정자립도, 인구당 의사 수,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까지 도달 거리 등)를 활용하여 지정하고, 응급의료 취약도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응급의료 인프라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예산 투입이 부족한 듯하다. 2017년에 예산이 감액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제가 3가지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과지표가 2개밖에 없어 사업의 목표 달성과 파급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

재정 집행률은 2016년 100.0%로 탁월한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집행 일정이 지연되고 일부 사업이 폐기되었으나, 대체 사업이 확대 시행된 점은 고무적이다. 2개 성과지표 중 1개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률(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부재 군 지역 집계)은 계획에서는 인프라가 확충되지 못한 지역이 9개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10개 지역이 인프라 취약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사업과 무관하게 일부 의료기관들이 스스로의 사정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 듯하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법정 기준 충족률은 67.9%(법정 기관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수 / 전체 응급의료기관 수)로 목표치 65.0%를 초과 달성하였다.

하지만 응급실 내원 환자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의료인력 구인난으로 응급의학 전문의와 필수 전문 진료과 전문의가 없는 응급의료기관이 다수 존재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개선 사항

응급의료 취약지를 선정할 때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 등 실제 응급의료 취약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경영난을 겪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실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전국의 모든 거점병원(권역 응급의료센터)과 취약지 병원으로 확대하고 장비를 추가적으로 보급하여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거점 병원의 간호 인력 파견 사업을 확대하여 취약지 인력난 해소 및 최종 치료 병원과의 협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는 등 지표를 보완하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간호 인력 파견과 관련한 성과지표를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1-2-2-1. ②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국민안전처)

1) 사업 개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의 구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119구급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속한 응급처치 제공을 위한 펌블런스 출동 시스템 운영 사업과 119구급 서비스 취약 지역에 소방헬기 및 나르미션 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펌블런스 출동 시스템은 119구급차가 없을 때 구급장비를 탑재한 소방 펌프차가 우선 출동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으로, 2015년 904개 센터 1,105대에서 2016년 976개 센터 1,183대로 운영을 확대하였다. 또한 펌블런스 탑승 요원을 전문화하려고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2급 응급 구조사 양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고, 전문 인력을 2015년 1,686명에서 2016년 1,843명으로 늘렸다. 일부 응급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에 위치한 1인 지역대(1인 근무 소방기관) 중 펌블런스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역대 수를 2015년 39개소에서 2016년 50개소로 늘렸다. 2016년 펌블런스 출동 실적(1월 1일~10월 31일)은 총 2만 9151건이다.

항공 응급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119구급헬기를 보강하고, 닥터헬기 운영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각 기관에서 보유한 헬기(소방 28대, 산림 45, 경찰 19, 해양경찰 17)를 통합 관리하여 신속하게 출동하고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도서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9나르미션을 운영하고

선박용 긴급구조 지원 단말기 운영을 내실화하였다. 나르미선의 실시간 위치, 이동경로, 해도 정보, 인근 선박 정보 등을 제공하여 환자 발생 신고 접수 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르미선을 탐색하여 통보하고, 이동경로를 모니터링하여 육지의 구급차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평가 내용

펌블런스 출동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농어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였다.

계획 측면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불리한 응급의료 여건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소방 헬기와 나르미선에 대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119구급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현 시스템에서 전문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로 펌블런스에 대한 지표는 있지만 소방 헬기 및 나르미선 활용에 대한 지표가 없어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다. 펌블런스를 운영하는 안전센터의 수(1인 지역대 포함)를 983개소에서 1,184개소로 확대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3) 개선 사항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농어촌 지역의 119구급 서비스를 개선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펌블런스의 탑승요원에 응급 구조사 1급이나 간호사 자격을 소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탑승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 헬기와 나르미선 활용에 대한 지표를 추가해야 하며, 펌블런스에 대한 지표 또한 목표치를 산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출동 실적 이외에도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고(이송 중 사망률 등) 펌블런스의 응급의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응급 구조사 1급,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 비율) 지표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1-2-2-2. 분만 취약지 지원(보건복지부)

1) 사업 개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2011년부터 추진해 2016년까지 24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다. 2016년 14개소의 분만 산부인과에 시설·장비 비용 10억 원, 연간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였다. 외래 산부인과 16개소에 대해서도 시설·장비 비용 1억 원, 연간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5개소에도 연간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내용

이 과제는 산모뿐만 아니라 산모 가족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농어촌 지역에 산부인과를 추가 설치하거나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고, 국내 분만취약 가임 인구 비율을 낮출 수 있었다.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분만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비(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입원실 등)와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공모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본 과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성과지표가 관내 분만율로 제시된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사업의 구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정 집행률은 2016년 100.0%로 탁월한 수준이었으나 현재 사업 예산의 50%를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2017년에는 신규로 선정된 분만 산부인과 2개소와 외래 산부인과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추가되어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성과지표인 관내 분만율(의료기관 분만 건수 / 당해 지역 분만 건수)의 목표치가 31%

였으나, 결과는 이에 못 미치는 29%를 기록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가입 인구가 산후조리원이 있는 대도시의 산부인과를 선호하여 나타난 결과인 듯하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의 효과로 국내 모자보건 지표가 개선되고, 분만취약 가입인구 수가 2011년 45만 명에서 2016년 16만 명으로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개선 사항

분만 취약지를 분만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접근성 기준 시간은 60분)으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접근 기준 시간을 단축시켜 지금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려면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하는 계획에 분만 취약지 지원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중장기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분만 산부인과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완화하고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분만 취약지 지원에 따른 관내분만율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면 사업의 지원을 받는 분만 취약지의 관내 분만율 변화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 진료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

1-2-4-1.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로 서비스 확산(보건복지부)

1) 사업 개요

지방자치단체에 건강증진사업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3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16년에는 833억 원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내용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이 계획되었고, 이에 적합한 수행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인지도, 참여도, 만족도, 체감도 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학계,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관리TF를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구분되는 17개 핵심 지표를 선정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지닌 광역 지자체별 사업지원단을 운영하여 시·군·구의 사업 기획 및 수행을 지원하였다. 지역별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역 특성(인구, 면적, 재정자립도, 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 표준화 사망률)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배분하였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이 이에 포함되지만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어촌 맞춤형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성과 지표인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성과 체감도 지표는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재정 집행률은 2016년 100.0%로 탁월한 수준이었으며, 2017년에는 모바일을 활용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22억 500만 원, 35개소, 3,500명 대상)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성과지표로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체감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과제의 성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3) 개선 사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 농어촌 주민의 건강수준 및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추가하는 등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1-2-4-2. ①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농식품부)

1) 사업 개요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하여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조사·연구하고 예방교육을 통

해 농업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농업인 직업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2013년부터 추진해 2016년까지 78억 원을 투입하였고, 현재 전국에 농업안전보건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평가 내용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체감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인의 주요 질환인 관절염과 농약중독 등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농촌 고령화 심화와 유병률 증가에 대응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질환 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었다. 연구 위주로 실제 사업이 구성되어 있고, 예방 교육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과지표가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개소 수로만 제시되어 있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질환별로 센터를 지정하여 농업인 진료, 재활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 처리까지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재정 집행률은 2016년 100.0%로 탁월한 수준이었으며,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전년도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활용하여 100개 마을, 4,200명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농업인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오·벽지 고령농에 대해서는 농협·지자체와 협업하여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하였다.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농업의 허리 질환 유병률(농업인: 63.8%, 비농업인: 48.7%)을 파악하고, 허리에 부담을 주는 농작업 자세를 규명하여 허리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였다. 이외에도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등과 MOU를 체결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3) 개선 사항

농업인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고, 예방 교육 및 찾아가는 무료 건강 검진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자료 DB를 구축하여 농업인 직업성 질환 예방 프로그램 및 예방 도구를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한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농업인 코호트는 조사 설계가 체계적이지 않아 활용도가 낮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원격 진료는 안전성, 유효성, 책임 소재, 환자의 이해 수준 등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안전보건센터가 농업인의 건강관리·증진에 기여하려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예방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를 성과지표에 추가하여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2-4-2. ②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해양수산부)

1) 사업 개요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조사·연구하고, 어업 작업별 맞춤형 예방법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부터 추진해 2016년까지 15억 원을 투입하였고 현재 전국에 어업안전보건센터 3개소를 운영한다.

2) 평가 내용

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농촌 고령화 및 유병률 증가에 대응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질환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성과지표가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개소 수로만 제시되어 있어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재정 집행률은 2016년 100.0%로 탁월한 수준이었다.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전년도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어업안전보건센터별로 근골격계 질환을 조사하고 모니터링,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업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사고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6,000부 제작하여 어업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낙도 지역의 고령·여성 어업인을 대상(5개 도서, 215명)으로 무료 건강검진, 진료,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산 사무소 및 보건소 등과 MOU를 체결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3) 개선 사항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낙도지역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어업인의 호응도가 높은 한의학 진료(침, 뜸 등)를 진료 과목에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6년에 근골격계 예방 가이드를 발간한 데 이어 어업인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감염성 질환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사업이 시작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어업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 활동을 확대함과 동시에, 연구 자료 DB를 구축하여 어업인의 질환과 어업 활동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질환 예방 프로그램 및 예방 도구 개발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어업인의 건강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를 추가하여 어업안전보건센터 사업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민 만족도 등의 지표를 추가하여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1-2-4-3.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보건복지부)

1) 사업 개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농어촌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56개소다.

2016년에는 정부에서 296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지자체 수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노인 특화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지원하였다.

2) 평가내용

지역 단위로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닦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 간 정신건강증진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에서 표준화된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농어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뿐,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운영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명시하였으나, 2016년에는 신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립 계획이 빠졌다. '노인 특화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별 정신보건 현황, 자살률 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농어촌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재정 집행률은 2016년 100.0%로 탁월한 수준이었다. 2017년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16개소를 신규로 확충하고 개소당 지원 단가를 1억 6,590만 원에서 1억 7,080만 원으로 인상하여 예산이 증가할 예정이다.

3) 개선 사항

노인 특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 모바일 기반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고위험군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기초지자체 수준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에 있어 정신의료기관 미설치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정책 효과를 검증하려면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 자살률 등 정신건강 관련 지표의 변화를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교육 분야 사업들은 대체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 사업의 확대 및 지속성 확보 요구가 있었다. 농어촌 교육지원 체계화 사업의 일환인 농어촌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은 현재 8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확대 실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농어촌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사업 역시 현장에서 확대 요청이 커,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학교의 여건과 상관없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특히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사업은 개별 학교에서 일찍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상세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점추진과제	평가대상 과제	담당기관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4)	2-2-1-1. 농어촌교육지원 체계화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2-1-2.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융합교육지원팀
	2-2-2-1. 농어촌학교 진로교육 강화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2-2-3-1. 농어촌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교육부 교원정책과

2-2-1-1. 농어촌교육지원 체계화(교육부)

1) 사업 개요

‘농어촌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80개교),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4,000개교) 등의 세부 사업에 대한 각종 컨설팅, 조사연구,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농어촌교육지원센터 1개소에 총 사업비 10억 400만 원을 지원한다.

2) 평가 내용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에 부합한다. 서울대학교에 '농어촌교육지원센터'를 지정·설치하여 여러 기능을 수행하게 한 것 또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어촌교육지원센터가 농산어촌 학교 ICT 활용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제작·보급,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성과관리 방안 연구',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개선 성과관리 연구', '농어촌 교육발전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정책 개선 노력을 꾸준히 진행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나 각종 연수 및 컨설팅이 실행되는 영역이 광범위하여, 농어촌교육지원센터가 모든 기능을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농어촌교육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 먼 단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별 우수 중학교 사업', 교통접근성이 불리한 농촌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행된 ICT 관련 연수 추진 등은 농어촌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사업'의 경우,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에서 사업 지정 학교 수가 현저하게 적어 사업의 지역별 안배가 미흡하다.

사업의 성과지표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 '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기엔 부적합한 지표다. 이 과제를 통해 여러 종류의 농어촌 교육여건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수혜자들의 만족도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3) 개선 사항

관련된 사업 중에서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은 각 농어촌 시·군에 1개의 중학교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애초 계획으로 하였다. 하지만 농어촌 시·군은 130개인데 80개 학교를 대상으로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량 측면에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을

종료하지 말고 '농어촌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을 통해 설치된 시설들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여가 시설이나 평생교육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교육지원 체계화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이 해당 사업들을 통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2-2-1-2.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교육부)

1) 사업 개요

농어촌 초등학생에게 원어민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시 지역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과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과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Teach and Learn in Korea)이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정부의 지원 예산 없이 시·도교육청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즉,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과제에 대한 평가는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인 TaLK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TaLK 장학생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해왔다. 농어촌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봉사 장학생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파견된 원어민 장학생들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2016년 한 해 동안의 총 사업비는 78억 2,200만 원이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 총 482명의 TaLK 장학생이 봉사하였다.

2) 평가 내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가 어려운 농어촌을 중심으로 원어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삶의 질 기본계획 비전인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과, 부문별 목표인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 추진 방식 측면에서 보면, TaLK 사업 예산을 특별교부금 35%, 지방비 65%로 안배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책임성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시·도 교육청별로 장학생 수요 인원 비율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하지만 TaLK 장학생과 학생들 간의 유대 관계나 관리 부분이 해당 학교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정책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업비 확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농어촌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대와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성과지표가 현재 농산어촌 지역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및 원어민 장학생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수로 설정되어 있다. 교육 소외 지역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에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방식이다.

3) 개선 사항

TaLK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TaLK 장학생들의 전문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영어 실력 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장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TaLK 장학생과 학생들 간의 유대관계와 수업 관리 등을 해당 학교에 일임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사업의 결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립학교 영어교사의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규모와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사업 대상 학교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2-2-1.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교육부)

1) 사업 개요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사업은 농어촌 학생이 지역적 소외를 극복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되는 사업이었으나, 학생과 교사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여 2016년에 확대 시행되었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사업비 34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2015년까지 투자된 금액까지 합하여 총 7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교육부 주관의 사업이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57개교를 대상으로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이 운영되던 것이 점차 확대되어 2016년에는 총 1,700개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동시에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직업 분류별로 멘토단(Mentor Pool)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멘토링 일정을 사전 공지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멘토와 진로교육을 받는 시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 내용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역적 소외를 극복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농어촌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농어촌 학생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전국의 농산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학교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멘토링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시간대에 10여 종의 수업을 제공하여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있으며, 멘토링 일정을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고 예약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멘토 구성에 있어서도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인원을 구성하였다.

성과지표로는 농산어촌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참여 학교 수를 활용하고 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지표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달성률이 100%를 넘고 있어 사업의 성과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개선 사항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은 농어촌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으로 앞으로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운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멘토단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멘토를 공급하는 루트를 다각화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분야에 대한 멘토링 수요를 조사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 멘토링 대상 학교와 멘토단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멘토단에게도 진로교육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멘토링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학교 내에 진로담당 교사의 유무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의 품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학교에 진로담당 교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2-3-1. 농어촌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교육부)

1) 사업 개요

농어촌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과제는 농어촌 학교에 적합한 우수 교원들을 배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어촌 학교 교장 공모 확대, 농어촌 학교 교원 배치 내실화, 농어촌 신규 교원 육성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 학교 교장 공모 확대’는 2016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서 공모학교 지정 시 농어촌 학교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여, 농어촌에 적합한 인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학교 교원 배치 내실화’는 교원 정원을 배정하는 기준을 ‘지역군별 보정지수’에서 학생 밀도와 읍면지역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한 ‘학교별 학생수’로 변경하는 정책이다. 농어촌 학교가 많은 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의 교원을 배정한다.

'농어촌 신규 교원 육성'은 학교 및 지역 단위로 교원을 임용하는 제도를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어촌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어촌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과제에 속해 있는 사업들에는 별도의 사업비가 할당되어 있지 않다.

2) 평가 내용

농어촌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과제는 지역적으로 소외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여,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축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인재가 교원으로 배치되고 있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에 능력 있는 공모 교장이 임용되고 실력 있는 교원이 배치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설정되어 있는 성과지표가 임용시험 지역 구분 모집 인원으로만 되어 있어 교장공모 실적과 교원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3) 개선 사항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에 배치되는 교원의 증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원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특별 채용을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임용시험 지역 구분 모집 인원 확대 지표는 본 사업의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사업이 농어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우수한 사업이지만, 지금의 성과지표만으로는 농어촌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 특히 교장 공모제의 경우에는 교장의 역량에 의해서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교원임용 제도 역시 안정적인 교원의 확보가 가능하지만, 역량 있는 교사가 채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3. 정주생활기반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정책과제는 농어촌 지역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주민주도 지역개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농어촌마을 유형별·역량단계별 개발 등은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농촌활력지원센터의 전문 기능을 확충하고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귀산촌 활성화 지원, 어촌공동체 경영활성화 등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현행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점추진과제	평가대상 과제	담당기관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8)	3-2-1-1.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3-2-1-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3-2-1-3. 농어촌마을 유형별·역량단계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3-2-2-1. 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3-2-2-1. ②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3-2-2-1. ③ 귀산촌 활성화 지원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3-2-2-2. 산촌주민 역량강화사업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3-2-2-3.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3-2-1-1.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농식품부)

1) 사업 개요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포럼 지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 농촌 현장포럼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6년 기준 총 21억 2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다.

농촌 현장포럼은 농어촌 주민이 마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려고 여는 회의 프로그램이다. 마을별 상황에 맞게 5개 유형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2016년 418개 마을에 15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시·도별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역량 강화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전국 9개 도에 소재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개소당 6,000만 원씩, 총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장 활동가 교육 22회(기초 20회, 심화 2회), 마을 리더 교육 46회가 진행되었으며, 현장 활동가 344명, 마을 리더 1,05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2106년까지 현장 활동가 총 2,081명을 육성했으며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및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2) 평가 내용

최근 주민의 역량강화 정도는 주민주도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농촌 현장포럼 운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 농촌 현장 활동가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본 사업은 현재 지역개발 사업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농촌 현장포럼을 현안해결형, 미래설계형, 공동체활성화형, 계획수립형, 깨끗한 마을 만들기형 등 5가지로 나누어 농촌마을 유형별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계획 차원의 타당성이 높다. 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자력형 마을공동체 중심의 농촌 지역개발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의 목표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집행 측면에서 보면, 현장 포럼 및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해 50:50(국비:지방비)의 비율로 지원하여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운영토록 유도한 점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비율을 확대하는 등 재원 분담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성과지표의 계획 대비 달성률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는 본 사업이 육성한 현장 활동가 수이고, 애초 계획은 2,050

명이었으나 실제 2,081명으로 집계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예산 집행은 목표를 100% 달성하였고, 일정 관리 또한 정상 추진되어 계획기간 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질 향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현장포럼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이상 증가하였다.

3) 개선 사항

현장 활동가가 기초교육(현재는 기초교육만 이수 시 현장 활동가로 인정) 이후 중·고급, 심화 과정을 통해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농촌활력지원센터가 단순히 주민역량 강화 교육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을 감독하고 사후 평가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전문 기능을 확충하고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단계 현장포럼 지원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2단계는 마을공동체 조직화와 사업추진 주체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현장포럼 추진 모델이 발굴되어야 한다. 또한 발굴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에 기초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1-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농식품부)

1) 사업 개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을 확산하고 그 성과를 평가·공유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 데 목적을 둔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의 형식으로 추진되며 마을분야와 시·군 분야로 나누어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올해 3회째인 행복마을 콘테스트에는 총 2,664개 마을이 신청하였다. 소득·체험 분야 982마을, 경관·환경 분야 945마을, 문화·복지 분야 408마을,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분야 329마을이 신청하였다. 2014년 1회 1,891개 마을이 참여한데 이어 참여 마을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사 당일 총 6개 분야에 걸쳐 30개 팀이 경연하였으며, 주민 및 관계자 1,7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수팀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우수마을 사례집과 동영상 제작 배부하였다. 2016년 시상, 홍보 등에 소요된 총 집행 예산은 9억 600만 원이다.

2) 평가 내용

농촌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콘테스트는 성공한 마을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마을에 대한 마케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기 추진된 활동에 대한 마을별 콘테스트 성격의 사업으로 4개 분야에 대한 도 평가와 중앙 평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농촌 마을공동체의 성공 사례를 홍보하게 됨으로써 농촌개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농촌 발전에 대한 희망을 확산하고 있다.

계획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개발 패러다임이 지역자력형 주민주도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성과를 홍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정책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농식품부의 콘테스트 추진계획 수립, 마을 및 지자체 신청·접수, 도 콘테스트 추진, 현장평가 및 중앙 콘테스트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추진체계가 합리적이다.

성과지표는 콘테스트 참가 마을 수로, 계획 대비 달성률이 100%를 상회하였다. 예산 집행 또한 100%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기간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3) 개선 사항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의 목표와 내용의 적합성 등은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나 성과 확산 및 평가 방식의 측면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대 편성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입상한 마을을 추가 지원해 성공의 효과를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마을에 대한 평가는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농촌운동 등 4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분야 간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 평가 분야에 대한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현행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이 콘테스트 위주로 진행되어 제 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을 충족하기에 미흡하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3-2-1-3. 농어촌마을 유형별 역량단계별 개발(농식품부)

1) 사업 개요

농어촌마을 유형별·역량단계별 개발 사업은 농촌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주여건 진단 지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수행하였다.

농촌마을 현황 파악을 위한 진단 지표를 간단 지표, 상세 지표로 구분하여 개발을 완료하였다. 간단 지표는 마을의 기초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본 현황 15개(인구, 가구수, 마을자랑거리 등), 정주여건 34개(보건·복지, 안전, 공동체 의식 등) 등 총 4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간단 지표에 근거하여 전국 3만 6836개 행정리 중 3만 5326개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농산어촌공간정보시스템(RAISE, Rural Areas Information Service)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 평가 내용

농어촌마을 유형별·역량단계별 개발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주여건 진단표를 작성하는 연구용역 사업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구조화된 진단 지표를 발굴하였고, 행정리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현재 행정리 단위 통계가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 결과가 향후 농촌 지역개발정책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행정리에 대한 현황 파악과 온라인 데이터서비스 구축은 농촌 마을의 자조적인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와 내용에 부합한다. 지자체의 행정 인력 활용을 통한 비예산 사업이라는 점과, 시·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 시 가점을 주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성과지표는 농촌마을 정주여건에 대한 진단 지표의 개발 여부이므로, 최종보고서 작성과 함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마을 맞춤형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과소화마을 관리 정책 발굴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나아가 행정리 단위의 정주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삶의 질 정책

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부처별로 추진 중인 소단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정책개발의 효과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개선 사항

데이터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성과를 향후 농촌 지역개발의 빅데이터 기반으로 활용하려면 정주지표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지표와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마을 유형별, 지역역량별 관련 정보 데이터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추진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농촌마을 실태를 대표하고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 할 가치가 있는 진단 지표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3-2-2-1. 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농식품부)

1) 사업 개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에 신규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활력을 증진하려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교육,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등이 이루어졌다.

2015년까지 455억 9,900만 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2016년에는 165억 6,900만 원이 투입되었다.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 11월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며,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귀농·귀촌 희망자 등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교육에 7,383명이 참여하고, 29억 2,9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55개 도·시·군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각각 50억 원, 고창, 영천, 함양 등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3개소 건립에 각각 60억 원, 귀농인의 집 70개소에 대한 지원에 10억 5,000만 원 등을 투자하였다. 그밖에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총 1만 8000여 건의 전화·방문·온라인 등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도 이루어졌다.

2) 평가 내용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신규 농업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의 활력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이 높다. 다만 실제 정착 과정에서 실패와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진입장벽 등의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목표는 농촌 지역의 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농정의 핵심 사업으로서 정책 타당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신규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에 활력을 증진한다는 명확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와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은 100% 달성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건립 대상이 감소하여 예산이 줄었다.

세부적인 사업 성과로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신규 유입 가구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정보 제공·교육·실습 지원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1년 이상 체계적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귀농·귀촌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애초 계획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된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베이비부머 은퇴세대의 유입을 장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귀농·귀촌인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 공동체의 리더로 활동하거나, 6차 산업 창업, 공동체 활성화 등의 활동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어 농촌 지역경제 및 사회 발전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개선 사항

청년층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창업농장 지정, 창업자금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하고, 귀농·귀촌 교육체계를 개편하여 젊은 농부들의 정착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귀농·귀촌 정책협의회 구성, 민·관 협업조직 활성화, 귀농·귀

촌종합센터 교육 및 상담, 멘토링 및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2-2-1. ②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해양수산부)

1) 사업 개요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에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유입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귀어·귀촌박람회 개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귀어학교 개설, 귀어·귀촌 홈스테이, 귀어·귀촌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까지 총 71억 1,7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6년에는 3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에 10억 1,700만 원, 귀어·귀촌박람회 개최에 4억 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에 16억 원, 귀어학교 개설에 5억 원을 투자하였다.

2016년에는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수도권으로 이전 개소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세대 당 대출 한도를 증액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였다. 귀어·귀촌 교육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귀어학교 개설, 귀어·귀촌 이동상담소,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운영하여 수혜자 중심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졌다.

2) 평가 내용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사회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종합적인 평가 결과, 예산 집행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업 목표 및 내용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며 사업 추진방식에서도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기초 통계자료의 부재 등의 이유로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정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반면, 예산 집행 부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예산 집행에 있어 이월 및 불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간 집행 실적도 72.8%로 저조했다.

성과 측면은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성과지표가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자 수로 설정되어 있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우수 사례 발굴 부분이 누락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귀어·귀촌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연간 1,000가구를 못 넘고 있어 지역 활성화 효과 또한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개선 사항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가구 수로 되어 있다. 세부 사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귀어·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확산 등의 질적인 효과를 점검하기에는 미흡하다. 향후 계획에서도 성과지표로 용자 지원자 수와 지원액 상향 등 자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 및 홍보 부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2-2-1. ③ 귀산촌 활성화 지원(산림청)

1) 사업 개요

귀산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귀촌인 중 귀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산촌에 정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교육과정과 '귀산촌 창업자금 지원' 용자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용자사업은 귀산촌 희망자 및 5년 이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 '귀산촌 체험 stay' 사업이 있으며 2016년에 8,000만 원이 투자되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된 '귀산촌 체험 stay' 사업은 기존의 '산촌미리살아보기 캠프' 구성을 유지하되 단순 체험형 프로그램에서 체류형으로 변경한 사업이다. 귀산촌 기초반, 산촌 소득반, 정착 예정반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체험 및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촌 체류형 프로그램에 135명이 참여하였으며 기타 강의형 교육을 포함하면 400명이 귀산촌 교육을 수료하였다. 귀산촌 창업을 1인당 3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2016년에는 총 33건, 58억 7,000만 원 규모의 신청을 받았다.

2) 평가 내용

귀산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비 귀산촌인에게 교육과 용자를 지원해 안정적인 산촌 정착 및 산촌마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과 큰 연관이 있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세부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방식의 합리성을 높이고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수요 예측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추진 방식의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예산 집행과 일정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향후 예산 확보 측면에서도 귀산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조선업 등 시기적 실직자를 고려하여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성과 측면에서는 귀산촌 교육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2016년에는 애초 계획 대비 162%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산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평가에서도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고, 교육 이후 귀산촌 인식의 향상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들 교육이 실제 귀산촌으로 이어져 산림업 인구 확보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성과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삶의 질 향상 기여도나 기타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다.

3) 개선사항

귀산촌 활성화 지원 사업의 현재 사업 내용은 귀산촌 희망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귀산촌 희망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귀산촌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3-2-2-2. 산촌 주민 역량 강화 사업(산림청)

1) 사업 개요

산촌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산림 자원이 풍부한 산촌 주변의 생태 환경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산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돕기 위해 산촌 주민의 창업과 발전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6차 산업을 추진하는 전국의 산촌 마을을 지원한다. 2016년에는 중부 권역과 남부 권역의 20개 마을(각 권역별 10개 마을)에서 사업을 시행하였다. 권역당 4억 1,000만 원(총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을 역량과 사업 계획을 평가하여 전체 마을의 상위 20%에 해당하는 마을에는 4,000만 원을, 하위 20%에 해당하는 마을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산촌 마을이 보유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20개 마을 중 13개 마을의 소득이 증가하였고, 12개 마을에서 일자리 수가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연소득이 15.8% 증가하였으며, 평균 4.3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 평가 내용

목표달성, 계획, 집행 등 사업의 추진 현황은 양호하나 사업 추진 방식의 합리성과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산촌 마을의 특성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 목표와 사업 계획의 내용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세부 목표에 부합한다. 사업 유형도 소득개발형, 판로확보형, 관광·체험중심형, 치유중심형, 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유형별로 특화된 사업 목표를 설정하였고 계획 내용을 타당성 있게 6차 산업과 연계시켰다. 단, 재원 부담이 적절하지 않고 사업 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이 미흡해 보인다.

예산 측면에서는 마을의 역량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전체 지원금의 10~20%를 자부담으로 두어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예산 확보와 일정 관리도 우수하게 추진하였다.

성과측면에서 볼 때, 마을의 소득이 평균 15.8%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단, 성과지표인 연소득의 증감 여부로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업을 시행한 60%의 마을에서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해당 마을 주민의 85%가 주민 간 화합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3) 개선 사항

산촌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사업의 주체인 마을과 행정이 추진 방향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민들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행정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마을 주민과 행정이 협의하여 공통된 추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등 여타의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을별로 여러 가지 유형과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므로 공통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서도 연소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성과지표만으로는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40%에 가까운 마을에서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없는 마을에서 사업을 개선할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시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귀산촌인 교육과 역량 강화 부문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3-2-2-3. 어촌 공동체 경영 활성화(해양수산부)

1) 사업 개요

어촌 공동체 경영 활성화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마을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이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2개 마을에 15억 원을 투자하였고 올해는 14개 마을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다. 역량 강화 교육은 마을 자원 발굴과 선진사례 학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역량 강화 교육을 수료한 마을 중 우수 마을을 선정하여 어촌 특화(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민 주도로 마을의 미래상을 도출하고 발전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까지 어촌 특화 시범사업에 총 8개 마을에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2) 평가 내용

어촌 공동체 경영 활성화 사업은 어촌 마을 역량 강화 교육과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어촌 공동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추진 방향과 목적은 바람직하나 현 추진체계상 어촌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지역 자원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교육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계획 부분의 사업 목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부문별 목표에 비교적 잘 부합한다. 단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사업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역량 강화 교육의 내용이 어촌 특화 경영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추진 방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일부 사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예산 측면에서는 예산의 집행, 확보, 일정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성과 측면에서는 성과지표인 교육 만족도 점수가 2016년에 85.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년 교육 만족도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역량 강화 교육이 어촌 공동체 경영 활성화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개선 사항

어촌 공동체 경영 활성화 사업은 역량 강화 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 과정을 다변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역량 강화 사업을 시범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연계하도록 마을 내 동력을 확보하고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어촌 특화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마을 별로 특색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4. 경제활동·일자리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정책 사업은 소프트웨어 측면(사업 운영 프로그램 개발, 관광협의체 설립, 리더 및 주민 교육 등)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관광 두레 사업은 휴먼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지역관광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숲을 활용하여 산림휴양 치유공간, 수목원, 산림박물관을 조성하였으나, 방문객과 주민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물리적 시설이라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일부 사업은 농어촌관광 사업 주체들(체험마을, 민박, 관광농원)의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관광 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업체의 리모델링, 재교육, 시설 개·보수 등의 과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점추진과제	평가대상 과제	담당기관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 제고 (14)	4-3-1-1. 농어촌 관광 품질 제고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지원과
	4-3-1-2. 관광두레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
	4-3-2-1. 농촌관광 품질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4-3-2-2.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4-3-2-3. 어촌관광 활성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4-3-3-1. 산림휴양·치유공간 조성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4-3-3-2.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4-3-3-3. 말산업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4-3-3-4. 음식관광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4-3-3-5.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
	4-3-3-6.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과
	4-3-3-7. 농촌유학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4-3-3-8. ① 농가-마을-거점 농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4-3-3-8. ② 농가-마을-거점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4-3-1-1. 농어촌관광 품질 제고(농촌진흥청)

1) 사업 개요

농어촌관광 품질 제고 사업은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관광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이 2013년부터 추진하였으며, 농촌 치유 관광 시장 분석, 농촌 관광 마을 활용 연구, 야외 여가 활동의 농촌 관광 마을 연계 방안 연구, 농촌 주택을 활용한 체류형 숙박 상품 개발, 농업인 디자인 역량 강화 및 전시 판매 시설 매뉴얼 개발 등 총 4개의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까지 12억 원을 투입하였다. 농촌 마을 치유 관광 프로그램은 29개 항목의 치유자원을 선정하였다. 심신, 인성, 음식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영암군, 예천군에서 운영하였다. 또한 602명을 대상으로 야외 여가 활동 실태를 조사하여 농촌 관광 마을 도입 방안을 연구하였고, 1,00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요구 분석을 실시하여 숙박상품 유형을 생활관광, 학습, 귀농, 치유 등 4유형으로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전시 판매 시설의 디자인을 개선하려고 점포형, 가판대형별로 디자인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부안군과 군산군의 2개소에 적용하였다.

2) 평가 내용

사전 수요조사 및 이해관계자(농업인, 전문가 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추진체계가 전반적으로 객관적이나 성과지표가 산출지표에 국한되어 사업 시행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범사업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계획 측면에서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였지만 주민들이 직접적 지원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달성률은 비율(%)로 산출되어야 하나 2016년 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주민 만족도를 시행 전후로 조사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3) 개선 사항

농어촌관광 품질 제고 과제의 사업 추진 계획은 양호하나 성과지표가 적절히 설정되

지 못하여 사업성고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향후 성과 측정을 위해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촌관광 수요 및 공급 여건을 반영하려면 도시민의 농촌관광 이용 실태 조사와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농생명 직업 진로 프로그램과 농촌관광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농촌관광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

4-3-1-2. 관광두레 조성(문체부)

1) 사업 개요

관광두레 조성 과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체'를 구성하여 숙박·식음·체험 등 관광 비즈니스를 운영하도록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2013년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총 37개 지역에 37명의 PD, 158개 사업체와 1,203명의 주민사업체가 관광두레를 조성하였다. 지역 주민 사업체의 창업, 경영개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려고 총 90억 원을 투자하였다.

지역별 관광두레 PD를 중심으로 주민 사업체 역량 강화 교육 114회, 멘토링 268회, 시범사업 62회를 지원하였다. 또한, 봄·가을 여행주간 동안 26개의 주민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13개 지역에 관광객 6만 3690명이 방문하였고 5,299만 1,00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14개 지역의 20개 주민사업체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3,191만 7,000원을 모금하였다.

2) 평가 내용

관광두레 조성 과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관광(농촌관광 포함) 육성 사업에서 탈피하여, 휴먼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관광 분야에 다양한 창의적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계획 측면에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단순히 주민 사업체 수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등급제 실시 마을 수 및 서비스 안전 교육 이수율 등 정량적 목표

로만 제시되어, 농촌체험마을의 서비스 품질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개선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성과 측면에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 등은 직접적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가 부재하며, 주민 사업체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할 지표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3) 개선 사항

관광두레 조성 과제는 농림부의 농촌 지역개발 사업 및 6차산업화 관련 시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추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가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관광 주민사업체에서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단계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1차 연도는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차 연도에는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며, 3차 연도에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두레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후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2년 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4-3-2-1. 농촌관광 품질 제고(농식품부)

1) 사업 개요

농촌관광 품질 제고 과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제는 2002년부터 시작하였고 2016년부터 기존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이 농촌육복합활성화지원사업(농촌관광활성화 지원)으로 통합 이관되었다.

농촌체험마을 사업자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450개소를 대상으로 등급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마을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계 상품 개발과 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네이버와 협업하여 농촌 여행 상품 205개소의 415종을 등록해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엔진과 연계하여 집중 홍보하였다. 체험마을(873개소), 관광농원(545), 농촌민박(24,246)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점검(7~8월, 12~2월) 및 국가안전대진단(4~5월) 등 부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농촌관광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를 점검하였다.

2) 평가 내용

농어촌 체험관광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이나, 마을 단위 농촌관광을 주요 공급 주체로 설정하여 정책 목표나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중관광 트렌드와 농업 경영 다각화 추세를 고려할 때 개별 농업경영체의 경영다각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성과지표가 산출지표에 국한되어 사업 시행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미흡하므로 방문 마을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계획 측면에서는 사업의 집행 및 성과가 '우수' 이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단순히 등급제 실시 마을 수 및 서비스 안전교육 이수율 등 정량적 목표로만 제시되고 있어 농촌 체험마을의 서비스 품질이 실제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성과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어촌 체험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으며,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이수율이 산출되어 있지 않다.

3) 개선 사항

성과 측정 측면에서 성과지표는 가급적 사업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측정하여야 하나, 사업 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인 산출지표(농촌체험마을 등급제 실시 마을 수,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 이수율)에 그치고 있다. 결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방문 마을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방향 측면에서 농촌관광 품질 제고 과제는 2016~2018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대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관광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주체를 마을협의회 뿐 아니라 개별 경영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4-3-2-2.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농식품부)

1) 사업 개요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과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과제는 2002년부터 시작하였는데 2016년부터 기존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이 농촌육복합활성화지원사업(농촌관광활성화 지원)으로 통합 이관되었다.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우수 관광자원을 15종, 826개 발굴하였고 및 국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다양한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고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처를 체험마을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하여 주요 도시에서 지역 농촌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역 인력 풀을 활용하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유치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531명)의 활동비와 보험료(안전 820개소, 화재 791개소)를 지원하였다.

2) 평가 내용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과제는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농촌 관광 활성화의 세부 과제로 우수 자원 선정, 콘텐츠 개발, 접근성 제고, 홍보 강화,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시행하였으나 성과지표가 산출지표에 국한되어 삶의 질 측면에서 사업 시행 결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계획 측면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따져 사업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농촌관광 활성화의 과제로 우수 자원 선정, 콘텐츠 개발, 접근성 제고, 홍보 강화,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이 시행 중인데 여기서 농업인의 삶의 질에 대한 내용보다는 방문객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가급적 사업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측정하여야 하나 사업 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인 산출지표(방문객 증가율)에 그치고 있으며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탓에 달성률이 28% 정도 수준이다. 농촌관광 활성화의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지표 발굴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지표는 사업의 특성상 농촌 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가율로 하고 있다. 방문객 증가율 계획 3.9%, 달성 1.1%, 달성율 28.2%, 예측은 달성 5.4%, 달성율 138.5%로 예측에 대한 자료가 없다. 방문객 증가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원인 분석이나 설명이 필요하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였다.

3) 개선 사항

방문객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참여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 협업과 자원 간 연계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여 농촌관광의 가치를 제고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비 집행 및 일정 관리는 우수하나 기타 정책효과를 파악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4-3-2-3. 어촌관광 활성화(해양수산부)

1) 사업 개요

어촌 관광 활성화 과제는 어촌 관광을 활성화하여 어업 외 소득을 증대하고 국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어촌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434억 2,200만 원, 어촌 산업 역량 강화 사업에 12억 1,000만 원, 어촌산업 정책연구에 9억 5,000만 원, 어업 유산 관리 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어촌 체험 마을 등급제를 확대해 방문객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어촌체험마을 특색을 반영하여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어촌 체험마을 시설 사업으로 각 개소 당 2억 원씩 총 5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어촌 체험마을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해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2) 평가 내용

사업의 집행 및 성과 달성 정도가 높지 못하다. 비경제적인 성과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계획 측면에서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추진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집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돌발 변수에 의해 예산 집행과 일정 관리에서 차질이 빚었다. 성과 측면에서는 삶의 질 향상 기여도의 평가 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개선 사항

어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어촌어항협회' 중심의 정책 추진 체계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정책 효과를 제고하려면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등의 활동이나 어촌체험마을 평가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촌 마을 등급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운영 등 어촌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촌 관광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4-3-3-1. 산림 휴양 치유 공간 조성(산림청)

1) 사업 개요

산림 휴양 치유 공간 조성 과제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부터 추진하였다. 휴양림을 조성하고 보완하였으며,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보완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까지 휴양림 17개소를 조성하고 80개소를 보완하는 데 42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치유의 숲 28개소를 조성하고 1개소를 보완하는 데 170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산림복지법, 산림휴양법 등 산림 휴양·치유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 평가 내용

사업 목표 및 내용이 상위 계획의 내용과 잘 연계되어 있지 않다. 사업 추진 실태를

평가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재설정하고 사업의 성과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더해 사업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방문객과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다각화해야 한다.

계획 측면에서는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유의 숲 예산 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 집행과 일정 관리는 공공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성과 측면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여도의 평가 기준에 맞추어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개선 사항

사업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립휴양림 스마트폰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과제의 세부 목표를 수요에 맞게 재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로 사업의 성과를 확산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은 연차별로 확대하여 조성하고, 숲속 야영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친자연적 캠핑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이용객의 불편사항과 시설 활용도를 모니터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4-3-3-2.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산림청)

1) 사업 개요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과제는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전, 기반 확립, 자원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BT·IT의 발달과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후 식물 자원의 보전·이용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원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산림사료 및 산림 생물 표본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교육적 전시

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한다. 국민의 정서 함양 및 휴양·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과제는 수목원 조성·보완·특성화 지원사업과 산림박물관 보완·특성화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총 4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데 1년은 설계하고 3년 동안 조성한다. 총 27개소의 수목원을 조성하거나 보완하고 특성화하는 데 102억 9,200만 원을 투입하였고, 7개소의 산림박물관을 보완하고 특성화하는 데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수목원과 박물관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체험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2) 평가 내용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과 목표는 좋으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의 상관성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계획 측면에서는 산림의 조성보다 이를 통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 목표를 재설정하고 사업 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

예산 집행과 일정 관리는 공공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성과 측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물리적 시설의 활용에 그치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개선 사항

과제의 목표를 수요에 맞게 재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물리적 시설 관리 위주의 사업에서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4-3-3-3. 말산업 육성 지원(농식품부)

1) 사업 개요

말산업 육성 지원 과제는 말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말산업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말산업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교육·홍보 강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부

터 추진하였다. 말산업 기반 조성 사업은 공공 및 민간승마시설 17개소에 77억 원(1개소 당 4억 5,300만 원)과 말산업 특구 2개소에 50억 원(1개소 당 25억 원) 등을 지원하였다. 경쟁력 강화 사업은 승마 대회 15회 이상에 19억 원(1회 당 1억 2,700만 원), 학생 승마 체험을 위해 각 시·도의 16개 학교에 36억 원(1인당 9~20만 원) 등을 지원하였다. 교육·홍보 강화 사업은 말산업 박람회 1회당 4억 원, 말문화 축제 7회에 13억 원(1회당 1억 8,600만 원), 말 자격시험 1회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내용

말산업 확산이 국민의 여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기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말산업 육성지원의 세부 과제로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교육 홍보 등을 시행하였으나 성과지표는 산출지표에 국한되어 사업 시행의 결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업 목표로 제시하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예산 일부가 집행되지 않았고, 일정 관리 역시 지연되어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계획 측면에서는 말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목표가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성과지표는 농업인의 삶의 질과 상관있는 효과를 측정하여야 하나 사업 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인 산출지표(승마장 수, 승용마 수, 승마인구)에 그치고 있다. 농어촌 주민보다는 말을 이용하는 전 국민에 성과 목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원 대상을 명확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집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산 집행은 자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자부담과 관련하여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일정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성과 측면에서는, 사업의 성과 목표는 대체로 달성했지만 승마장 개소 수 지표는 일부 미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계획 시 사전에 토지 이용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 지원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야 한다.

3) 개선 사항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성과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다. 또한 말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으나,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말을 조련하고 유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유소년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승마가 레저·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4-3-3-4. 음식관광 활성화 지원(농식품부)

1) 사업 개요

음식관광 활성화 지원 과제는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주 갤러리,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3분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전통주를 6차 산업화하여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통주의 저변을 확대하여 판로 확대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다.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전통주의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한 복합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통주 갤러리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주에 대한 전시·체험·정보 등을 제공하여 전통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은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6개소에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양조장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양조장 및 관계 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통주 갤러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전통주 체험,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홍보 행사, 상품 개발,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다.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은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을 개편하여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신규 고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마련한다. 전통식품 전시·체험·홍보를 지원하였으며 식품 명인의 전통식품 만들기 강좌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 평가 내용

성과지표를 양조장 개소 수, 전통주 갤러리 내방객 수, 전통식품 체험프로그램 수 등으로만 선정하여 사업성과 측정이 어렵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여도나 지역농산물 소비 기여와 관련한 정량적인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는 사업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측정하여야 하나, 사업 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인 산출지표로 측정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지양하고 방문객 만족도, 소비와 연계한 소득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성과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집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산 집행은 양호하나 차년도 예산이 감액되었다. 또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대한 업계와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확대되어 지정 확대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예산 지원 방식이나 지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 측면에서는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주 갤러리 신규 개소 및 연중 운영, '이음' 개관 등의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기타 정책 효과(지역농산물 소비 향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3) 개선 사항

성과지표 측면에서 사업 목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부합하도록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지표를 사업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재설정하고, 성과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방문객 만족도, 소득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방향 측면에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업계와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확대되어 지정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이후 예산 지원방식이나 지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주 갤러리 사업은 위치를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갤러리의 홍보와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 확대 사업은 기존 체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여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4-3-3-5.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문체부)

1) 사업 개요

슬로시티 고유 향토자원(자연자원, 전통음식, 전통 전승문화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적 슬로시티 가치·문화 정립 및 지역 관광 자원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 신안에 1억 원, 경북 상주에 5,000만 원, 충북 제천에 5,000만 원씩 3개소에 총 2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까지 18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평가 내용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프라 조성 제고, 홍보 강화,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성과지표로 생태관광 만족도를 선정하였고 예산은 100% 집행하였으며, 생태관광만족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성과지표로 선정한 생태관광 만족도의 측정 방법은 적절하다. 하지만 슬로시티 녹색관광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추후에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집행은 양호하나 재정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차년도 예산이 감액되었다.

생태관광 만족도는 초과 달성하였으나 기타 정책 효과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3) 개선 사항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지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 이용실태, 만족도, 개선점 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발굴할 필요도 있다. 평가 사항에서 언급했듯이 기타 정책 효과를 생태관광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성과지표를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

사업 방향 측면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며,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4-3-3-6.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농촌진흥청)

1) 사업 개요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과제는 농촌과 자연을 주제로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청소년에게 농업·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 교육농장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도모한다.

2006년부터 추진하여 24개소의 농촌 교육농장을 육성하였다. 5,000만 원씩 총 12억 원을 투자하였다. 농장의 평균 소득이 약 8% 증가하였고, 학교 교육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로 교육계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

2) 평가 내용

교육농장 사업의 경우 일부 시·도와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족한 사업 물량을 보충하고 있다. 교육농장 육성 목표를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별로 새롭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의 청년층 일자리, 전문직 계통의 귀농·귀촌, 농가 자녀들을 위한 승계구도 등을 감안할 때 교육농장 육성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추진 기간 동안 조성된 교육농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사업의 집행 및 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목표, 내용, 추진 방식은 양호하지만 성과지표를 소득액,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집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산 집행 및 일정 관리 등은 잘 이뤄졌다.

성과 측면에서는 성과지표를 수혜자 만족도(방문객)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교육농장을 수행하는 농민의 만족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개선 사항

품질 인증을 일반 체험 농장까지 확대하여 교육농장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농장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 추진한 교육농장 사업체의 리모델링, 재교육, 시설 개·보수 등의 과제를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3-3-7. 농촌 유학 활성화(농식품부)

1) 사업 개요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 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둔다.

2010년도부터 추진하였고 2016년 21개소의 농촌유학센터를 선정하여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농촌유학 참여 학생이 전년 대비 14명이 증가하였다.

2) 평가 내용

농촌 유학 활성화 과제는 도시의 어린이들과 농촌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하고, 주민과 함께 농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지역에 활력을 주고 나아가 도시 어린이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돕는 사업이다. 농촌 유학 홍보 및 농촌 유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계획 측면에서는 사업의 목적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며, 세부 사업 간 연계성도 양호하고, 사업 추진 방식도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지나치게 기계적(매년 20개소)으로 선정하였다.

성과 목표는 계획대로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나 자료가 없다.

3) 개선 사항

농촌 유학 활성화 과제는 개별 농가가 경영다각화 차원에서 농촌 유학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법인 사업자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농촌 유학 참여 학생 수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를 '몇 개소 지원'과 같은 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산촌유학생 숫자(몇 명)'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귀농귀촌박람회',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등 도시민이 주요 대상인 행사에 참여하여 농촌 유학에 관심이 있는 도시 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단기 캠프 형태의 '예비 유학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유학을 홍보해야 한다. 농촌 유학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수시로 추진하여 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

4-3-3-8. ① 농가-마을-거점 농촌 체험휴양기반 확충(농식품부)

1) 사업 개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테마로 휴식·휴양 및 체험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농촌 주민과 도시민에게 여가·체험·휴양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농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7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16년 78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592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1,27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매출액 80억 9,600만 원, 방문객 220만 명, 입장료 수입 25억 5,400만 원의 성과를 냈다. 2016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부여군에 농촌테마공원 1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 평가 내용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큰 사업이다. 투자 대비 수익성 관점에서 사업 기획, 마케팅, 운영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사업성과를 제고(민관협력 방식, 운영권 부여 등)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영역을 대폭 보강하여야 한다.

계획 측면에서는 지역 자원의 활용, 지자체 자율성 보장,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 전문가 자문,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등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집행 측면에서, 예산 불용이나 이월 없이 잘 집행되었고, 2017년도 예산은 준공 예정인 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확보하였다.

성과 측면에서는 농촌테마공원 방문객수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도농교류, 특산물 판매,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3) 개선 사항

1개 시·군당 1개소의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면 테마공원의 차별성과 희소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별로 5~10개소 이내로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향후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기준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조성 완료 후 활용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사업비 사용 범위에 운영 프로그램 개발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지연 추진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과 목표로 방문객 수 보다는 특산물 판매, 고용 창출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4-3-3-8. ② 농어가-마을-거점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해양수산부)

1) 사업 개요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체험·관광시설을 구축하여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 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제는 2013년부터 추진되어 2016년까지 28억 8,1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어촌 체험 관광 지원 사업은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 시설 지원, 경관시설, 상하수도, 화장실과 같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2016년 신규 4개소에 11억 원, 기존 6개소에 28억 8,600만 원으로 10개소에 총 39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내용

개소 당 사업비가 25억 원씩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읍·면 단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 주체의 경영 능력 확보가 관건이다. 하드웨어 사업 외, 소프트웨어 사업(사업운영 프로그램 개발, 리더 및 주민교육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계획 측면에서는 사업 목표나 추진 방식은 양호하게 설계되었으나, 성과 목표 설정은 전년도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1.5%)으로 책정되었다.

3) 개선 사항

사업 내용에 운영 프로그램, 교육,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

목표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 지연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모니터링 기관을 분리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 목표를 산업화 형태에 따라 지원 유형을 분리한 후 지원방식별로 내역사업을 재분류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5. 문화·여가

문화·여가 부문의 사업들은 대부분 농어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개별 시설마다 농어촌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률이 제고되었다. 본 사업을 계기로 지역 내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를 활용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동체 복원과 삶의 질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성과지표도 이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사업은 지원 대상에 사업 목표와 관련이 없는 지역축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관광 축제지원 사업은 관광객의 만족도만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다.

중점추진과제	평가대상 과제	담당기관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3)	5-2-1.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5-2-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5-2-3.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2)	5-4-1.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5-4-2. 문화관광 축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5-2-1. 생활문화센터 조성(문체부)

1) 사업 개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한 사업이다. 각 지역의 유희 시설

과 문화여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동호회 등의 연습, 회합, 발표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도에는 16개 시·도에 34개의 시설을 지원하였다. 국비 30%, 지방비 70%의 비율로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2016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총 사업비는 292억 8,000만 원이다.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유휴 시설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을 함께 병행하고 있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2) 평가 내용

농어업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기존처럼 시·군·구 단위로 여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 단위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의 비전과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어촌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예산 지원, 컨설팅, 공간 확보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에 적합한 형태로 계획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시·군·구 단위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여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업 추진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일정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획된 일정 내에 컨설팅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리모델링하려는 건물의 가액을 지방비 매칭으로 인정함으로써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재정 부담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확충된 시설 수가 성과지표로 설정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설이 조성된 이후에 지역주민 참여도나 만족도 등이 성과지표에 추가되어야만, 해당 시설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주민주도형 운영, 생활밀착형 조성,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을 반영한 지원,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으로 정책성도가 타 사업에 비해 높다. 특히 일률적인 모델의 적용이 아니라 농어촌 특성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이용률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 사업을 계기로 지역 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정책 효과가 여러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3) 개선 사항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전체 국민의 문화 및 여가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 및 농어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에 정책적 효과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에 적절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모델 수립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성과 목표는 산출지표에서 성과지표로 바꾸고, 지자체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 구조(예산 매칭 비율 3:7)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매칭으로의 전환 시 개별 지자체 의지에 따라 예산 배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 추진 일정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내의 의사결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는 등 예산 집행에서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이 사업이 정책 추진의 효과성이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수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해 성과지표에 현재의 확충된 시설 수뿐만 아니라, 시설이 조성된 이후의 지역주민 참여도, 만족도 등도 함께 추가할 필요가 있다.

5-2-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문체부)

1) 사업 개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지역공동체

를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자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예술 교육, 주민동아리, 주민강사육성, 마을축제, 주민간담회 및 공동체 교육, 주민운영위원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진행하였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27개의 마을공동체에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마을공동체당 평균 3,400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49%에 해당하는 13개 지역이 농산어촌의 공동체였다. 활동 건수는 3,632건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134.5건이며, 수혜자 수는 6만 4870명으로 집계되었다.

2) 평가 내용

문화 소외 지역(임대아파트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 지역, 농산어촌 등) 및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안에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민 중심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사업 대상에서 농어촌 지역이 약 49%인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맞춤형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내 유무형 자원(역사문화유적, 마을풍물, 민요,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인 사업으로서 정책 효과가 큰 사업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농어촌 마을의 선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농어촌 삶의 질 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문화여가 분야 사업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민간단체와 마을(공동체)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정 관리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나, 사업 예산 집행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자유주제 컨퍼런스', '성과 공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많은 지역에 수혜가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선정된 마을만 놓고 보면 해당 지역주민에게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동

체 육성에 집중함으로써 사라졌던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3) 개선 사항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전체 국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의 확산 효과를 추구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으로 도시 지역 외에 농어촌 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농어촌은 지리적인 조건과 농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생활 일정 등으로 인하여 실제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문화 활동 구조를 만들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농어촌에 적합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공동체를 만들고 지속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화 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의 지속성, 마을 주민의 공동체성 회복 측정, 연간 공동 활동의 변화 등을 함께 측정하여 공동체 활동의 증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2-3.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문체부)

1) 사업 개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각 지역이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적 특색을 가진 도시 및 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더 나아가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하면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물 건립 등의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주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지원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며, 문화도시형 사업과 문화마을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문화마을형 사업이다.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적 사회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 역량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3년간 연 2억 원(국비 8,000만 원, 지방비 1억 2,000만 원)이 지원된다. 2016년에는 문화도시 17개소와 문화마을 29개소에 국비 75억 원이 지원되었다.

2) 평가 내용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농어촌 맞춤형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 주도의 자생적 생활문화 활동 및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사업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마을 사업은 농어촌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계획과 집행, 성과 측면에서 주민주도의 문화여가 증진 및 관광자원개발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농어촌 마을 주민들은 지역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관광 상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자원들을 목록화하는 데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색을 가진 '문화마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운영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활동, 축제 진행 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마을 사업이 마을의 내생적 발전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개선 사항

초기 기획에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는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추가 지원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전시킬 기회가 사라진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사업 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지원 대상 마을의 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소수의 마을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하여, 성과가 높고 잠재력이 큰 마을에 사업을 연장하는 식의 단계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본래 사업 계획에는 '문화마을 자문평가단'의 자문 및 지원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자문평가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에 있어서 중간지원 조직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민 스스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마을이 질적·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문화마을 사업'의 목적인만큼,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4-1.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문체부)

1) 사업 개요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의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총 16개의 사업에 4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2016년에 개최된 행사로는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부산불꽃축제(부산), 대구생활예술페스티벌, 대구공연예술제, 대구핫페스티벌(대구),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광주),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세계대한민국아리랑축전, 영월단종문화제 국장연출, 영월동강국제사신제, 강릉단오제신통대길 길놀이, 국행수륙대재 설행(강원), 계룡군문화축제, 백제문화제(충남),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전남),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경북) 등이 있다.

2) 평가 내용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사업의 목표는 농어촌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해보면, 사업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전통문화자원의 복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문화관광축제나 행사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사업 목표나 농어촌 삶의 질 계획의 비전 및 세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업성과지표는 지역별 행사 개최 건수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성과지표는 산출지표이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문화자원 복원 및 확산,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과 연관성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산 집행 및 예산 확보는 100% 달성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일정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양적으로 보면 사업 목표가 100%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나 전통문화 복원 및 확산이라는 사업 목표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 사업성과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언론보도 및 홍보 노력은 많았으나 축제 등 개별 사업에 대한 홍보여서 이 사업의 목표와 결과에 대한 공감이나 공유와는 연관성이 적다.

3) 개선 사항

사업대상, 사업 추진 방식 및 정책 효과 등이 사업의 본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전통문화를 현대적 콘텐츠와 접목하여 대중화하려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지원 대상을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의 전통문화자원을 복원하고 확산한다는 사업의 궁극적 취지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

5-4-2. 문화관광 축제 지원(문체부)

1) 사업 개요

문화관광 축제 지원 사업은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축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며, 지역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199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43개의 문화관광 축제에 총 59억 9,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축제 프로그램의 총 수익금은 약 2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고용 효과는 2,345명,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총 2,499억 원으로 추정된다.

2) 평가 내용

문화관광 축제 지원 사업의 목적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축제 중에서 특색이 있는 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고, 지원하는 상당수의 축제가 농어촌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전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하여 과제의 목표와 계획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향유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 목표 대비 달성도를 확인해 보면, 성과지표인 관람객 수의 목표 달성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다. 지역 주민 참여, 관광 효과, 지역 정체성 확립, 주민 개인의 경제적 효과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축제마다 성과 차이가 크다. 특정 축제는 10개월 전부터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부터 집행까지 담당하는가 하면, 어떤 지역축제는 여전히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수 축제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대체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결합되어 있다. 문화관광축제와 지역공동체 축제 성격이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축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 문화·여가 기회 확대, 전통문화자원 복원 및 활용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언론보도, 홍보 노력 등이 탁월하고, 지역 주민 자긍심 제고, 경제적 효과, 관광 효과 등의 기타 정책 효과가 우수하다. 관람객 만족도 조사, 언론홍보, 워크숍, 정책 공유 컨퍼런스, 협의체 구성 등 정책 수행 및 공유 측면에서 다양하게 노력했다. 지역축제에 대해 국민, 지역민, 지자체 등이 모두 만족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개선 사항

경쟁력을 가진 축제를 선별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

로 소비자 평가, 전문가 서면 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갖추었다. 하지만 지원 방식은 지역 간에 무리한 경쟁을 촉발하고, 인력이나 재정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지역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수한 지역 축제는 연속해서 우수 축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책 성과를 확산하려면 우수 축제로 선정되지 못한 농어촌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문화관광 축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지표는 관람객 수와 만족도 등 산출지표와 결과 지표로 골고루 구성되어 있으나, 대체로 축제의 대외적 정체성과 브랜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지나치게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농어촌 문화관광 축제는 관광객을 위한 축제이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강조되는 마을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6. 환경·경관

환경·경관 부문의 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취약지역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여 경관과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민간 수거 및 재활용 업체들과 생활쓰레기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설 관리 체계 확립과 수거 보상금 대상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모델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다양한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갯벌 복원 사업을 어촌경제 활성화, 어가 소득 기회 창출 등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문화·복지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주민 혜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점추진과제	평가대상 과제	담당기관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7)	6-2-1-1.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6-2-1-2.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6-2-1-3.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6-2-2-1. 주민참여형 마을 도랑 살리기	환경부 유역총량과
	6-2-2-2.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6-2-2-3. 갯벌생태계 복원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6-2-3-1.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6-2-1-1.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환경부)

1) 사업 개요

농어촌 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생활환경보호와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가 사업시행 주체이며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2016년까지 총 2,895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6년에는 14개소 설치에 78억 5,5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다. 영양군, 철원군, 양구군 등 신규 사업 10개소에 50억 원, 금산군, 양양군, 신안군 등 계속 사업 4개소에 29억 원이 투입되었다. 2011년에 수립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전략에 따라 최적화된 시설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하여 시설의 경제성 및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2) 평가 내용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농촌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최적화 과정보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과 산간 및 도서 지역 등 폐기물 처리 취약지역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처리현황 및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전략에 따라 투자 효율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기반 확보라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내용에 부합한다. 정책 대상의 특성과 수요 예측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나 농어촌 특성을 잘 감안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전략에 따라 최적화가 반영된 시설에 우선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노력이 돋보인다. 단, 농어촌에 특화된 사업이라 보기 어려우며, 시설 입지와 관련한 주민 갈등의 여지도 있다.

추진 일정에 따라 2016년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졌으며, 2017년 예산도 증가하였다. 성과지표인 생활폐기물 소각률 및 매립률의 목표치를 각각 100%를 달성하였다. 환경기초시설인 매립/소각 시설을 설치하여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를 실현하였으며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과목표치는 소각시설 증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소각률이 감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깨끗한 농어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농어촌 주민과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생활소득 향상 등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다.

3) 개선 사항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진행된 사업이다.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 관련 조사 및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 완공 이후 폐기물 재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어떻게 지역 내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처리시설 유지관리 과정에서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 부문의 쓰레기 수거 업체, 재활용 업체들과 더불어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협력체계(생활쓰레기 자원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중심 역할을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농어촌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6-2-1-2.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환경부)

1) 사업 개요

농어촌, 단독주택 밀집 지역 등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 수거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여 분리배출을 장려하고 거점 수거체제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 취약지역 내 거점 수거 시설을 2025년까지 8,72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전국 3,488개 읍·면·동 중 분리배출이 취약한 1,744개 읍·면·동 당 최대 5개소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2015년에는 111개소 9억 2,7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6년에는 163개소 13억 8,200만 원(개소 당 8,500만 원)으로 확대 투자하였다. 지자체가 50%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총 20개 지자체에서 참

여하였다. 2015년에 설치한 강원도 50개소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면, 월평균 수거량은 11% 이상 증가하였고, 수집 및 운반비용이 기존의 문전 수거 방식에 비해 32%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 평가 내용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분리배출을 장려하고, 기존 문전 수거 방식을 효율성이 높은 거점 수거체제로 개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은 사업이다. 도시와 농촌, 두 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농촌 특성을 반영한 분리배출 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대, 관리체계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 목표 및 내용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 맞춤형 사업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운영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시 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에 있어 도시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 사업이 시행된 지 2년 차이이며, 최근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향후 농어촌 지역의 분리배출 시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운영 방식 개선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간 예산 집행은 양호하게 이루어졌으며 일정 관리 또한 원활하게 준수되었다. 다만 사업 시행이 일부 지자체(경상북도 성주군)에 집중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이 금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다. 농촌 지역의 추가적인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하고 있는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으며 주민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본 사업을 통해 영농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불법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단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시된 수거함 크기 문제, 재활용품 수거 주기, 운영 및 관리 주체 명확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3) 개선 사항

이 사업은 거점 수거 시설을 설치하는 하드웨어 위주 사업이다. 향후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영농폐기물의 경우와 달리 농촌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자율적 분리·배출을 유인하기 어렵다. 올바른 분리 배출 및 적절한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수거 및 재활용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교육 등 사후 관리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재활용 선별 라인을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체계를 조정하여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배출 후 환경오염이 큰 과수착색용 폐반사필름을 수거·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폐반사필름은 소각이 불가능하며 겨울철 전신주 정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폐비닐과 농약빈병 외에도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집집마다 개별 수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수거, 배출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시설이 부족하여 주로 마을회관이나 공터, 도로변의 노지 등을 지정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비, 바람에 따른 쓰레기 유실과 해충 및 악취 발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동 수거장이 갖춰진 마을에서도, 배출 장소까지 거리가 먼 주민들은 공동 수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분리배출 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2-1-3.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환경부)

1) 사업 개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사업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하고 수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및 위탁 처리, 농약용기 수거·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은 마을별 영농폐기물(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의 1차 수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3년 간(2014~2016) 10개 시·도에 총 2,900개소를 설치했으며 43.5억 원을 투입하였다. 2016년에는 950개소를 신설했으며 14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 지원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시행 주체는 지자체이며 농민 등 배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보상금은 지자체에 따라서, 그리고 비닐의 등급별로 차이가 있다. 국비 지급의 경우 10원/kg의 정액제로 지급한다. 2016년 10월말 기준 농촌 폐비닐 수거량은 17만 2448톤이며 17만 2154톤을 처리하였다.

농약용기 수거·처리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이 공포된 1987년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환경공단이다. 농민 등 배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보상금 지원은 폐농약빈병 50원/개, 폐농약봉지 60원/개로 한국환경공단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가 40%씩 지원한다. 2016년 10월 말 기준 폐농약병 3,500만 개, 폐농약봉지 1,300만 개를 수거·처리하였다.

2) 평가 내용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된다. 영농폐기물 재활용에 있어 처리 및 관리가 중요하다. 영농폐기물 중 폐농약용기 수거와 관련한 단가 상승 및 주민 대상 중간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의 목표와 내용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대상의 특성과 수요 예측에 대한 근거 자료는 없으나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단 성과지표가 공동집하장 수로만 되어 있고 다른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없는 상황이다. 농촌 지역에서 필요성이 높음에도 집하장 설치 목표 수가 감소하는 것은 감점 요인이라 하겠다.

예산 집행 측면에서는 양호한 상태로 사업이 완료되었다. 2017년 예산도 2016년 수준으로 확보하였다. 사업 추진 일정도 원활하게 준수되었다.

성과 측면에서는 농어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집하장 수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재활용률 증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목표치를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동집하장 설치에 따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을 상시로 관리하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동집하장을 설치한 마을은 영농 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시로 집하장에 배출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기에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방치돼오던 폐비닐의 수거율이 상승하여 농촌 지역의 환경·경관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 논밭이나 마을 공터에 방치되어 유실되는 양을 줄일 수 있어 재활용 비율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영농폐비닐 수거량이 증가하고 비닐류

를 분리 배출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수거보상비를 이전보다 많이 받게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마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3) 개선 사항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사업은 공동집하장 설치와 수거 보상비 지급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공동집하장 설치 이후 주민 스스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처리 시 마을 공동체에 역할을 부여하거나 우수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농약용기 수거 사업에 대한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 등 객관적 평가를 실시해 사업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동집하장 설치 개수의 하향 추세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지원 사업인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관리상의 문제이다. 대다수의 공동 집하장에서 생활 쓰레기 혼합, 쓰레기 무단 투기, 비닐류 분리 배출 미흡 등의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주민이나 지자체 모두 큰 문제로 여기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 마을에서는 CCTV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읍·면 단위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배치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주민 대상 홍보,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집하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부지 선정의 문제가 있다. 공동집하장 설치를 원하는 마을이라도 적합한 시설 부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입지가 올바르지 않게 선정된 경우에는 집하장 방치, 수거율 감소, 관리 부실의 근본 원인이 된다. 한편 사유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시설 부지의 토지 사용 변경을 요청하거나 사유지를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부지사용에 대한 별다른 보상책이 없기 때문에 마을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앞으로 집하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려면, 부지 선정, 입지선정, 활용 계약 등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 즉, 사업이 시행된 마을의 발생량과 수거량을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업의 성과지표는 '공동집하장 설치 개소 수'이다. 기초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목표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 볼 수 있지만, 실제 공동집하

장이 얼마나 수거 효과를 높이고 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 집하장이 설치된 이후 수거량이 발생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마을도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마을의 폐비닐 발생량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공동집하장 설치가 오히려 폐비닐 수거·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읍·면 단위에서 수거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6-2-2-1. 주민참여형 마을 도랑살리기(환경부)

1) 사업 개요

주민참여형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쓰레기,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되고 방치된 농어촌 마을의 도랑을 복원, 관리함으로써 수질 및 하천생태계, 마을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 주민, 학교, 민간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마을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 시작되어 2016년까지 57억 4,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016년에는 77개소에 14억 800만 원이 투입되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46개소, 총 연장 1,196km 구간에 해당한다. 지자체에서 복원 및 관리가 필요한 도랑을 신청하여 평가하면 사업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 후 2~3년 간 사후 관리비를 계속 지원하여 수질 및 수생생태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환경의식 개선, 정화 활동, 친환경 생활실천 등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 협력과정과 연계하여 마을 공동체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

2) 평가 내용

주민참여형 마을 도랑 개선사업은 하천의 가장 끝단에 있는 도랑에 대한 복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하천생태 및 수질에 대한 환경 질 개선 효과가 높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정책 수혜자의 자발적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 사업 추진 성과의 실효성 및 파급효과가 우수하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오염되고 방치된 농어촌 마을의 도랑을 복원하여 수질 및 수중생태계, 마을 환경을 개선한다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잘 부합하고 있다. 수혜자와 공동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이 합리적이다. 성과지표가 실적 위주의 산출지표에만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2017년도에도 21억 원으로 2016년 대비 49%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 사후 관리사업의 확대 추진과 사업 신청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자문회의 및 추진계획 수립을 거쳐 공모 및 선정, 사업 추진, 중간점검, 사업평가, 우수사례 선정 및 표창의 순으로 일정이 관리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 하천이 복원되면서 하천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을 주민, 지역 기업 등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지역 환경 개선 협업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우수 사례에 대한 표창, 홍보, 지식공유 등의 노력을 계속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맺는 행정 절차와 업무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계기금 지원 및 100% 국고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개선 사항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말 것이 아니라 마을만들기 등의 활동과 연계 추진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사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小)유역 단위 위주의 토막형 사업이 아니라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근린생활지구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고 보조금을 가지고 기관위임 사무로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혹은 근린생활지구 교부금을 지급하여 주민참여형의 자치적 사업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6-2-2-2.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환경부)

1) 사업 개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천 및 하구로 유입된 부유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여 수질오염 및 하천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쾌적한 국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까지 총 760억 6,000만 원이 투자되었다. 2016년에는 70여 개 지자체에 104억 1,500만 원의 국고를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연중 4만 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으며, 제2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일반 시·군의 국고 보조율을 70%(광역시 40%)로 상향 설정하였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70% 이상을 쓰레기 수거인력으로 우선 선발하여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매년 600명 이상의 인력이 고용되었다. 2016년 기준 660여 명이 고용되었다.

2) 평가 내용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교육 등 긍정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천·하구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여 농어촌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수질오염 및 하천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한다. 70개 지자체에 약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개 지자체에 1.4억 원이 투입되는 규모이다. 일반 시·군과 광역시의 국고 보조 비율을 70%와 40%로 차등 지급하여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하천·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100%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지만, 집중호우 발생 빈도 감소로 인해 2017년 예산은 전년 대비 10%(국고 기준) 감액되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지자체는 전년 대비 2개소 증가하였으므로 예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관리는 해당 연도 지침 마련, 국고 교부, 현장 점검, 정산 및 독려, 결산 및 편성의 절차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태풍 등 집중강우 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지자체 현장 점검 및 독려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자리 지원 대상자 수 및 장년층 고용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고용 인원은 115%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장년층 고용 비율은 목표치 대비 91%로 다소 낮았다.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및 수거처리 업무 기피 등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어 2017년도 성과지표를 80%로 하향 조정하였다. 하천·하구 쓰레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다.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교육 등의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천·하구 쓰레기의 관리 특성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주민에 대한 환경교육으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3) 개선 사항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성과를 높이려면 쓰레기 발생원을 파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하천·하구 오염에 영향을 주는 일정 범위까지 포괄해서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사업 내용, 수혜자, 추진 과정 등에서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6-2-2-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해양수산부)

1) 사업 개요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은 훼손, 방치, 오염되고 있는 갯벌 지역(폐 염전, 폐 양식장 등)을 복원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기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능이 떨어진 갯벌의 퇴적물 및 오염토를 정화하여 해저 생물을 구제하고 갯벌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강화군에 11억 6,700만 원, 태안군에 10억 원, 순천시에 20억 원이 투자되었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대상 지역은 강화 동검도 갯벌, 순천만 갯벌, 태안 근소만 갯벌로 2년에 걸쳐 사업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동검도 갯벌 복원사업은 연륙교 일부 구간을 해체하고 교량화하여 해수를 유통시키고 갯벌생태계 기능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평가 내용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은 생태계 기능 유지 및 복원에 따른 정책 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어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창출 방안, 수혜자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적이 미흡하다. 정책 기대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

사업 목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과지표가 단순한 산출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보완해야 한다. 예산 집행과 일정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2017년 총예산은 감액되었으나 신규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다. 예산 확보 노력은 우수하다. 성과목표 달성도는 탁월하였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 기여도와 기타 정책효과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적은 미흡하다.

3) 개선 사항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와 정책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등 사업 단계별로 성과지표를 정해야 한다.

본 사업을 통해 생태관광이나 어업자원 확보 등 어촌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공간적 규모, 소득 창출 방안, 수혜자 등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갯벌에 대한 사전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6-2-3-1.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환경부)

1) 사업 개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장, 소각장 등 주민 기피시설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주민소득으로 연결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흥천의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발전시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중국, 동남아 국가에 친환경 기술을 수출하여 기후변화 선도국가로서 국격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7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2016년 기준 139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1개소 당 52억 원씩 총 15개소에서 3개년 동안 사업이 시행된다.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이다. 기초 지자체가 시행 주체이다.

2016년에는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 명소화'와 2015년 선정한 친환경타운 5개소, 2016년 신규 사업 5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홍보를 위한 소책자를 제작·배포하였으며 한·중 환경 공동연구 사업을 지원하였다. 홍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폐자원을 활용하여 연간 주민 수익 1억 9,000만 원을 창출하였다. 거주 가구가 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등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었다. 2017년에는 신규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중국과 한·중 공동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개도국 수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2) 평가 내용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주민 기피시설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 복지 관련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이다. 다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추진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된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에 맞으며 사업목표 및 내용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지표는 사업소 개소로 설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 집행은 적절하게 완료되었으며 2017년 예산도 확보되었다. 다만 달성률이 75%에 그치고 있다. 공모 및 워크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순서로 충실하게 일정이 관리되었다.

성과 목표의 경우 10개소를 선정하였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2개소가 탈락하였다. 전체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2016년 선정 목표에는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소 수 미달로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이미 실행된 곳에서 주민들의 반응과 정책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 생산과정에서 냄새가 난다는 주민 의견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타운의 입주 기준 및 절차를 확립하고, 주민의 자치적 관리를 구축해야 한다.

3) 개선 사항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낮은 재정자립도 등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행 가능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추진과 확산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본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마을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을 자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시설의 초기 투자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혹은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7. 안전

안전 부문 사업은 대부분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농어업인이 재해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어업 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의 사업은 정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농가 규모, 소득,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이 받는 지원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입률 향상을 위한 보험 상품 개선과 전담기관 설립, 관리체계 구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 수정이 필요하며, 정량적 평가에 한계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정성적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중점추진과제	평가대상 과제	담당기관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조성 (10)	7-2-1-1.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7-2-1-2. 농업인 업무상재해 보장제도 지원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7-2-1-3.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7-2-1-4.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7-2-2-1.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7-2-2-2. 어업재해보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7-2-3-1.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현황 조사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7-2-3-2. 농업인 업무상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7-2-3-3. 농작업안전관리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7-2-3-4.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7-2-1-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식품부)

1) 사업 개요

농업인이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 여건을 만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대상 가입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급여 및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였다. 안전재해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과제로 1996년부터 추진해 2016년까지 4,793억 원을 투입하였다. 2016년에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을 통해 각각 27,648건, 5,767건의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사고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했다. 또한 보험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보험 상품 다양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2) 평가 내용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여건을 만들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목표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올해 보험 가입률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안전재해 보험료가 인상된 탓인 듯하다.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보험 상품으로 개선·개발해야 하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계획 측면에서는 농가별로 보험료를 차등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구별 소득 수준이나 영농 규모의 차이,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재정 집행률은 82.1%였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가 2015년 대비 45% 수준 이상으로 인상(1형 기준: 74,900원 → 108,500원)되었고 보험 가입률은 55% 수준으로 낮아, 애초 계획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보험 가입률 저하는 2017년도 예산 감소로 이어져 향후 적극적인 계획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성과 판단 지표는 정량적 기준인 보험 가입률이다. 2016년 성과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피해 농업인의 보상 범위나 금액 확대에 수반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나 농업인의 보험 가입 기피가 있었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 가입률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홍보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대책이 다소 미흡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보험에서 제시하는 보장 수준이 향상하여 농업인의 보험 혜택은 증가하였다. 「농업인안전보험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보험사업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개선 사항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과제의 개선 사항을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가입연령 확대하는 등 보험 상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84세로 되어있는 최대 가입 연령 기준도 상향해 많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농가에서는 사후 보장보다는 생존 보장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여 입원 및 수술 급여 보장금액을 높여야 한다. 일반 재해사항의 보험료는 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민원을 반영하여 일반재해사망 특약을 신설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농가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 가입 추세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 손해 담보 가입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기계 기종별 모델을 단순화하여 차량가액을 표준화하여 산정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언론 매체, 설명회 등 다각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

7-2-1-2. 농업인 업무상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농촌진흥청)

1) 사업 개요

농업인 업무상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과제는 안전재해와 농작업과의 관련성 인정 기준, 예방·보장사항 등에 관해 연구하여 안전재해 보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 제도 통합연계 방안 연구,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 연구, 보상 관련 연구 등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였다. 2016년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내 전담 부서(농업인안전보건팀)를 신설하여 업무상 재해 예방연구를 위한 신규 연구사를 확보하고 과제를 직접 수행하였다.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콘텐츠 개발 및 관리체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 제안, 모바일 앱 개발, 안전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지표 현장 적용 평가 등이 이루어졌다. 보장 및 예방 지원을 위한 국내외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농업인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2) 평가 내용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과제는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정책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농업인 업무상 질환의 직업 관련성 평가 기준 마련, 농작업 안전 인증체계 구축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연구 결과를 추적조사 하는 등의 실제 성과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연구 과제의 성격에 반해 성과지표가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과제 성격에 맞게 성과지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농업 R&D 아젠다 체계에 따라 농업인,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 수요를 예측하고, 추진체계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 과정의 사회 공론화, 의견 수렴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정책 반영 등을 중요시하여 협의회 및 연구회 개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질적 평가가 병행될 수 있게 성과지표를 보완해야 한다.

2016년도 재정 집행률 100%를 달성하였다. 예산 확보 상황은 2016년도 대비 83%인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전담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연구 인력 증가, 신규 과제 도출 등에 따른 추가 예산을 반영·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 측면에서는 계획 대비 200% 달성을 나타냈다.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책자 발간 등 홍보를 통해 학계, 정책 입안자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지속적인 정책 교류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개발된 콘텐츠, 기술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나 활용도 등에 대한 조사 평가를 병행하는 연구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개선 사항

현재의 성과지표는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과 홍보 및 거버넌스 확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수행한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건수를 평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연구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성적 평가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7-2-1-3. 수산인안전공제(어업인안전보험) 지원(해양수산부)

1) 사업 개요

수산인안전공제 지원사업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 등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지비를 촉진하여 어업 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업인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과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52,000여 명이며 총 보험료의 50%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보험가입 대상 확대 및 보험급여 신설 등 어업인 재해보상을 강화한 어업인안전보험을 출시하였으며, 연중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가입을 독려했다. 18,955명이 가입하였으며, 3억 6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원하여 어업인 가정의 가계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다.

2) 평가 내용

수산인안전공제 지원 사업은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와 질병에 대비하여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다. 연중 보험가입 캠페인을 벌이고 설명회, 신문광고 등 홍보활동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으나 어업인 안전보험가입자 수는 평가 시점에서 목표치 대비 72% 달성하였다.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어업인 재해 공제보다 보장 수준을 상향했으며, 보장급여 항목을 추가하여 산재 수준의 보험으로 향상했다. 보험료 인상과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확대에 따른 가입 대상 인원 수 감소, 정부 예산 규모 등을 고

려하여 성과지표를 보험 가입자 수로 변경하고 산정하였다. 그러나 성과지표 설정에서는 안정성 유지를 위해 성과지표는 가입률, 목표치는 가입자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재정 집행률은 2016년 100%로 탁월한 수준이며, 예산 확보도 7.6% 증가한 17억 3,200만 원을 확보하였다. 추진 계획도 일정대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다.

지표의 성과 목표를 72% 달성한 것으로 제시하였지만 평가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목표치 설정도 2년 전 가입자 수를 목표로 하는 등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입 대상 어업인이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홍보 노력 부족 등으로 성과 목표 달성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실적

단위: 명 (2016. 11. 기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상인원	73,466	61,789	58,059	51,869
가입인원	30,294	26,146	25,526	18,955
가입률	41%	42%	44%	37%

주: 대상인원 2014년 농림어업조사통계(어업종사가구원 수) - 어선원보험 가입자 + 영업종사자
 자료: 해양수산부 제공

3) 개선 사항

무엇보다 영세 어업인 및 어업 근로자들에게 재해 보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입률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언론 홍보 및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합리적 성과지표를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목표치를 가입자로 설정하고, 성과지표는 가입률로 조정하여 지표의 적절성을 유지해야 한다.

7-2-1-4.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해양수산부)

1) 사업 개요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과제는 보험 가입을 높여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을

이행하고 재해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여 어선원 및 어업의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과제는 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한 홍보 사업과 보험료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부터 어선원 11만 4000명, 어선 6만 4000척을 대상으로 톤급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자체 및 수산 유관단체와 연계한 수산정책보험 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비 보조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경기·인천·부산 등 11개 지자체에서 지방비 100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 외에도 장애 어선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한 의료재활 시험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내용

어선원 및 어선 보험지원 과제는 당연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목표에 부합한다. 그러나 2004년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을 시작하여 2016년 현재 가입률이 7.8%, 20.6% 수준이므로, 가입률 향상을 위한 보험 상품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이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목표에 맞으며, 어촌 현실에 적합하도록 어선원 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을 어선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 설계한 측면은 바람직하다.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가입 어선원 증가 추이와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지만 수요 예측체계가 농어촌 노령화, 인구 분산화 등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100%의 집행률을 달성했으며, 일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다. 2017년도 예산확보 상황은 2015년 국고보조금 미지원액(79억 원)이 반영되지 못해 6.2% 감액된 1,059억 8,700만 원을 확보했다. 당연 보험 가입자 증가와 요율 상승분이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산 감소로 2017년 계획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 측면에서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기에는 다소 불명확하다.

3) 개선 사항

어선원 및 어선 보험 가입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으로 피해를 본 어

업인의 조기 어업활동 복귀 및 영어 의욕 고취를 위해 중요하다. 3톤 이하 소형어선으로 갈수록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은 한 자릿수로 내려간다. 재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형어선의 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7-2-2-1.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농식품부)

1) 사업 개요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과제는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험으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의 보험료 지원과 홍보 활동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부터 추진해 2016년까지 1조 8,908억 원을 투입하였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농작물 50품목, 가축 16종, 수입보장 4품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보험 대상품목의 확대와 사업지역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정비와 보장을 강화하였다.

2) 평가 내용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실적이 우수하여 농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탁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과 보장수준 확대를 통해, 벼 보험 가입면적은 전년 대비 80% 증가, 농작물 보험 가입률 5.6%p,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2%p가 증가하였다. 재해보험가입의 증가는 경영안정 효과를 나타내는 재해보험 경영안정지수도 전년 대비 3.85%p 증가로 이어졌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계획 측면에서는 재해보험 제도를 일방적인 정부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농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 목표 및 내용이 적합하였다.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정책보험인 재해보험을 지속해서 확충해 오고 있으며, 그 정책성과의 지표로 재해보험 가입률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큰 자연재해가 없어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나 체감도가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2016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도 적절했다.

재정 집행률은 67.2%였으나 2017년 예산확보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대상 품목 확대로 보험 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2017년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 및 시·군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나, 고령화, 소득수준, 영농규모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무사고 환급 등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였다. 그러나 자료 축적의 미비, 보험에 대한 농촌 현장에서 인식 부족 등으로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3) 개선 사항

사업 추진 체계에 있어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효과를 재점검해보고 사업 추진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보상 품목이 많고 검증 절차가 복잡하므로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인수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평가 등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금 과다 지급 등 손실 요인이 발생하여 손해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수평가, 손해평가, 검증 등에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목과 보장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성과지표인 가입률은 품목확대와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보험 가입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과제명과 성과지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7-2-2-2. 어업재해보험(해양수산부)

1) 사업 개요

어업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여 양식 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돕는다.

과제는 24개 품목의 1만 어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피해보상이 가능

하도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손해평가를 선진화하는 기반확충사업으로 구성된다. 2008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의 100%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22억 원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내용

양식어가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업재해보험은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2016년 보험 대상 품목을 21개에서 3개를 추가하여 24개로 확대했으며 지원 대상 어가는 262어가를 추가 편입하였다. 시범사업 지역도 어업인의 수요와 지자체 건의, 양식 현황을 바탕으로 10곳 확대하였다. 피해보장 강화를 위해 미역, 다시마, 송어, 전복 등 품목별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양식수산물 품목별로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입보장보험 도입 방안 마련 등 어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대안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어업재해보험 가입률(54.2%)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률(92.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재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수의 양식 어가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은 품목, 양식장 면적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 고령이나 저소득 어업인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비율의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료는 차등화하여 지원해야 하고, 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예산 재정 집행률은 2016년에 100%였다. 2017년도 예산은 20.7% 증가한 268억 1,200만 원을 확보하였다. 대상 품목을 확대, 가입률 제고 및 보험요율 상향에 따른 순보험료 규모 증가, 어업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 관련 예산(2.8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2017년도 계획 실행에 있어 예산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지표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로 적절하고,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목표 달성도는 더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노력은 좀 더 필요하다.

3) 개선 사항

최근 들어 적조, 태풍, 수온 변화(고수온) 등 다양한 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양식업 경영에 있어 재해피해의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다수의 어가가 보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종자(종묘) 재해보험, 어업수입보장보험 확대 등으로 어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품개발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의 차등화 노력도 병행하여 어업인의 가입률을 높여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7-2-3-1.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해양수산부)

1) 사업 개요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현황 조사 과제는 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를 통해 어업 작업별 맞춤형 질환 예방·치료 연구 및 교육, 홍보 등 어업인의 의료와 복지 증진을 높이고자 한다.

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와 결과를 활용한 교육장비 및 안전장비 개발 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였다. 총 150개 어촌계, 2,985 어가, 4,283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작업별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질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질환·재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2) 평가 내용

어작업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현황 조사 결과는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과지표 설정이 조사 사업 시행인 과정지표로 설정되어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는 객관적으로 분석되지 않는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계획 측면에서는 3,000명의 어선 어업인 표본 어가를 대상으로 주요 질환 현황을 조사하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해상 조업 등 어업

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한다. 수요자의 반응을 파악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데 효과적인 절차로 보인다.

재정 집행률은 87.5%였으며, 2017년도 예산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한 것은 객관성 강화 및 전문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절했다. 또한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다. 조사 결과가 정책 수립과 매뉴얼 개발 등 기초자료로만 활용되어 성과가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조사 대상인 어선 어업인을 어촌계 어가에서만 선정하면 조사 결과가 편향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 선정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개선 사항

조사 결과에 대해 최소 3년간 조사 및 보정을 통해 통계청의 통계자료로 등록할 계획이다. 국가 통계화로 공식화할 경우를 대비하여 표본 및 모집단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선 어업인 중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표본 어가 선정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분야가 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No. 14303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로 제공하는 것을 참고하여 조사추진 체계와 조사(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7-2-3-2. 농업인 업무상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농촌진흥청)

1) 사업 개요

농업인 업무상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질병 및 손상)의 규모와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업무상 재해 국가통계 품질 향상 및 관리지원 연구,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영향요인 분석, 업무상 재해 현황 조사, 중대 재해의 유형별 원인조사를 하는 연구사업이다. 2014년부터 실시하여 2016년까지 1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였다. 2016년 업무상 재해 국가통계 품질향상 및 관리지원 연구에 7,400만 원, 농업인 업무상 영향요인 분석 연구에 5,000만 원, 현황 조사에 250만 원, 중대 재해 유형별 원인 조사에 140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전문가 패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해 및 해석

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전국 표본추출에 의한 약 1만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 및 손상 통계를 분석하였다. 2015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 분석 결과를 국가통계포탈을 통해 제공하였으며, 유형별 농작업 사고 원인 로지스틱조사 결과를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중앙 DB 센터에서는 각 지역 센터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집적화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농업안전보건센터 자료의 중앙 DB화 및 국가종합 손상 통계 생산에 기여하였다.

2) 평가 내용

본 과제는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및 질병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정책 수립의 지원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직업 복지 관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그러나 성과지표가 연구과제의 성격인 데 반해 다소 세부적인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어 과제의 성격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목표치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성과(과학적인 성과 분석)를 확인하는지를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와 함께 결과 활용의 성과목표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해야 한다. 재정 집행률은 100%이며, 2017년 예산은 전년과 같이 확보하였다.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력 확충에 따라 조직이 확대되었음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성과 측면에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단순히 조사 농가 수, 결과 활용 건수뿐이다. 연구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 기술 개발의 활용도 등의 조사 평가를 병행하여 성과 측정에 반영해야 한다.

3) 개선 사항

성과지표를 연구 사업에 맞게 수정하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성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함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재검토해야 한다. 결과 활용 측면에서는 단순히 통계치를 제공하고, 결과 보고서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질환 통계기반의 정책 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관련 조직이나 대상자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7-2-3-3. 농작업안전관리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농촌진흥청)

1) 사업 개요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해 농작업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 안전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농업의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작업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과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부터 추진해 2015년까지 31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였다. 2016년 농작업안전모델시범을 통해 25개소에 6억 2,5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으로 145개소에 3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324개소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를 지원하고(80억 9,400만 원), 16개소의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을 지원(8,000만 원)하였다. 그 외에도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 담당자의 전문지도 역량 강화,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과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자료 보급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2) 평가 내용

정책 수혜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고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다. 농작업 재해 예방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 내용과 목표 사이에 연계성이 있으며 수혜자 설정이 명확하였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의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추진사업 현황조사, 정책·통계자료, 언론보도 조사로 수요를 예측하고, 사전 수요조사, 예산 배정위원회·농업 산학 협동심의회 운영 등 단계별 추진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외에도 재원 부담과 사업개선도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농작업 효율 개선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이나, 성과 목표치는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진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며 재정 집행률은 100%였다. 2017년 예산 확보에 있어 전년도 98.1%로 다소 적게 확보되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은 전년도 수준의 사업량과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1,479개소가 현장 새 기술

시범사업으로 보급되어 사업 신청이 많았음에도 예산이 다소 적게 확보되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각종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담당자,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질적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농가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며, 농작업 재해 예방으로 농촌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건강증진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선 사항

매년 100%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달성률이 2014년도부터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고민과 함께 2017년 예산 감소에 대비하여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농기구 사용 안전 의식 교육 및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7-2-3-4.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농촌진흥청)

1) 사업 개요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과제는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기술의 교육·정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인적 재해 예방관리 강화로 농업인의 직업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

작목별 농작업 안전 체험 매체 개발, ICT 기술을 융합한 개인 보호구 개발, ICT 기술을 융합한 농작업 편이장비 개발, ICT 기술을 활용한 농작업 부담 평가기술 개발, 농업인 건강 안전 정보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까지 총 8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다. 2016년에도 작목별 농작업 안전 체험 매체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대상 안전재해 예방 관련 교육 자료 7종을 발간하였다. ICT 기술을 접목한 농작업 조끼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자동 사료급여가 가능한 운반 대차, 개인 착용형 응급상황 감지 기술 및 센서 부착 깔창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농업인

건강 안전 관리 정보를 교류하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건강 안전 정보화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2) 평가 내용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목표에 부합하는 과제가 분명하나, 성과지표를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 및 정보화 접속 건수로 설정하여 사업으로 인한 성과가 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연구개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용화 및 현장에서의 활용 연계 방안 마련을 연구내용에 포함해 농업인의 직업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성과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정보화 접속 건수'의 경우 과거 실적치와 비교했을 때 낮게 책정했다. 또한 지식재산권과 자료 발간이 합쳐져 있어 지표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성과지표 자체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재정 집행률은 100%이다. 2017년 예산은 양돈작업환경 개선 안전관리 기술 개발 신규과제 추가로 전년 대비 15.8% 추가 확보하였다.

제도 개선과 성과 유지 및 관리체계는 갖추었지만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근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 평가, 언론보도, 부처 협업 등의 정책적 효과를 이루었으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3) 개선 사항

연구개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용화 및 현장 활용성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연구 내용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농작업 안전기술과 실용화된 정보의 활용성 관련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연구 개발, 전문적 안전기술 서비스 인력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 양성과 농작업 안전기술 서비스의 보편적 보급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section



부록

[부록] 평가 결과(요약)

- 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보통·개선 필요 과제로 구분
- 우수 12개(20.7%), 보통 41개(70.7%), 개선필요 5개(8.6%)

평가등급	부문	과제명	담당부처청
우수 (12)	교육(3)	2-2-1-2.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2-2-2-1. 농어촌학교 진로교육 강화	교육부
		2-2-3-1. 농어촌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교육부
	정주생활기반(4)	3-2-1-1.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2-1-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2-1-3. 농어촌마을 유형별·역량단계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3-2-2-1. 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경제활동·일자리(1)	4-3-3-6.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촌진흥청
	환경·경관(2)	6-2-2-1. 주민참여형 마을 도랑 살리기	환경부
		6-2-3-1.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환경부
	안전(2)	7-2-2-1.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7-2-2-2. 어업재해보험	해양수산부
보통 (41)	보건복지(9)	1-2-1-1. 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 의료인력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
		1-2-1-2.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보건복지부
		1-2-1-4.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 시범사업	해양수산부지과
		1-2-2-1. ①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1-2-2-1. ②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국민안전처
		1-2-2-2. 분만취약지 지원	보건복지부
		1-2-4-1.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산	보건복지부
		1-2-4-2. ①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2-4-2. ②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해양수산부
	교육(1)	2-2-1-1. 농어촌교육지원 체계화	교육부
	정주생활기반(3)	3-2-2-1. ②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
		3-2-2-1. ③ 귀산촌 활성화 지원	산림청
		3-2-2-2. 산촌주민 역량강화 사업	산림청

(계속)

평가등급	부문	과제명	담당부처청	
보통 (41)	경제활동·일자리(10)	4-3-1-2. 관광둘레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4-3-2-1. 농촌관광 품질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4-3-2-2.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4-3-2-3. 어촌관광 활성화	해양수산부	
		4-3-3-1. 산림휴양·치유공간 조성	산림청	
		4-3-3-2.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4-3-3-3. 말산업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4-3-3-5.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문화체육관광부	
		4-3-3-7. 농촌유학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4-3-3-8. ① 농가-마을-거점 농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여가(5)	5-2-1.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5-2-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5-2-3.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5-4-1.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5-4-2. 문화관광 축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환경·경관(5)	6-2-1-1.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6-2-1-2.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환경부	
		6-2-1-3.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환경부	
		6-2-2-2.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환경부	
		6-2-2-3. 갯벌생태계 복원	해양수산부	
	안전(8)	7-2-1-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7-2-1-2. 농업인 업무상재해 보장제도 지원	농촌진흥청	
		7-2-1-3.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해양수산부	
		7-2-1-4.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해양수산부	
		7-2-3-1.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질향 현황 조사	해양수산부	
		7-2-3-2. 농업인 업무상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촌진흥청	
		7-2-3-3. 농작업안전관리 시범 및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촌진흥청	
		7-2-3-4.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농촌진흥청	
	개선필요 (5)	보건복지(1)	1-2-4-3.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보건복지부
		정주생활기반(1)	3-2-2-3. 어촌공동체 경영활성화	해양수산부
		경제활동·일자리(3)	4-3-1-1. 농어촌 관광 품질 제고	농촌진흥청
			4-3-3-8. ② 농어가-마을-거점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해양수산부